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2.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3. 임시정부와 유일당운동

I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1)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

(1)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제1차 세계대전은 독점적 자본주의체제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서구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식민지와 시장확보를 둘러싸고 폭발한 제국주의전쟁이었다. 전쟁의 결과 열강간 힘의 관계가 재조정되고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재편되었다. 세계경제의 지도적 지위에 있었던 영국이 몰락하고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전쟁 중에 일어난 세계사상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은 러시아를 전쟁에서 이탈하게 하여 제국주의전쟁을 전면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했다.¹⁾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서구열강이 유럽의 긴장고조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신속하게 이 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굳혀갔다. 그들은 동맹국인 영국이 독일과 교전상태에 들어간 것을 구실로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독일령의 남양군도뿐만 아니라 靑島를 비롯한 중국 산둥반도 일대의 독일 租借地까지 점령했다. 나아가 일본은 袁世凱 정권에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여 만주와 산둥성, 그리고 북건성 및 내몽고지역의 식민화까지 기도했다.²⁾

1) 이지원, <3·1운동>(《한국사》 15, 한길사, 1994), 83~84쪽.

2) 이정식, <1910년대 국제정세>(《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19쪽.

전쟁의 결과 세계사의 중심무대는 유럽·대서양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건이 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했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만주에 대한 경제적 팽창을 도모하고 독일의 점령지였던 남양군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차 일본과의 대립이 필연적이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편으로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노선이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창설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다.³⁾

식민지의 지위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17년 11월 러시아혁명을 일으킨 뒤 레닌(V. Lenin)은 자국 내 100여 개 소수민족에 대해 ‘민족자결’을 원칙으로 하는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선언〉(1917. 11. 15)을 선포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 신음하고 있던 아시아의 피압박민족을 고무시켰다.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W. Wilson)도 전쟁 중에 표출된 피압박민족의 독립 열망을 반영하고, 전후 식민지 문제 처리방안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다.⁴⁾

레닌과 윌슨이 표방한 ‘민족자결’은 전후 식민지 약소민족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표면상 동일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으나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윌슨은 열강간 국제협약과 국제연맹하의 ‘위임통치’라는 형식으로 식민지 약소민족의 문제를 점진적·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레닌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혁명에 의한 제국주의 타도만이 식민지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민족운동세력은 미국이 일본과 잠재적인 적대관계에 들어갔다고 간주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이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를 처리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뒤에 3·1운동을 추진한 ‘민족대표’들도 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민족자결주의를 독립운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⁵⁾

3) 조민,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정세〉(《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59~60쪽.

4) 김용구, 《세계의교사》(서울대 출판부, 1998), 539~540쪽.

(2) 정부수립운동과 〈대동단결선언〉

1910년의 ‘한일합방’부터 3·1운동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전개된 정부수립운동의 무대는 미주와 노령, 북경과 상해 등 세계정세의 변동에 민감한 지역이었다. 이 시기에 전개된 정부수립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따라서 1910년대 정부수립운동은 전쟁이 발발하는 1914년을 전후로 하여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처음 정부수립이 제창된 곳은 미주 한인사회였다. 1911년 초 ‘미일전쟁’설이 유포되자 박용만은 이를 조선이 독립할 기회로 포착하여 사회조직인 대한인국민회를 정치조직인 ‘無形國家’로 건설할 것을 제창했다.⁶⁾ 이를 위해 대한인국민회를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인 ‘임시정부’로 설립, 3권 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시하며, 병역과 납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1910년대 전반기 한국민족운동의 주된 방략인 독립전쟁론을 미일전쟁이라는 가정하에 제시한 것으로 당시 노령과 만주의 무장독립운동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주목된다.⁷⁾ 그러나 전쟁설의 誤判, 대한인국민회를 임시정부보다는 한인의 ‘자치기관’으로 위치지우려는 온건론에 밀려 더 나아가지 못했다.

반면에 노령 연해주는 만주와 함께 ‘독립전쟁론’에 따라 독립운동기지화가 추진된 독립전쟁의 주요 거점이었다. 여기에서 勸業會는 1914년 러시아에서 ‘제2 러일전쟁’설이 팽배한 가운데 大韓光復軍政府의 설립을 주도했다. 대한광복군정부는 노령과 중령을 세 개의 군구로 나누고 사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노령과 만주에서 양성된 ‘광복군’을 망라하는 전투 편성계획까지 수립했다.⁸⁾

5) 李炳憲,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출판국, 1959), 514쪽.

6) 《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金度勳,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9), 258쪽.

7) 尹炳奭, 《增補 李相高傳》(일조각, 1998), 159쪽.

8) 리영일, 《리동휘 성재선생》(필사본), 201쪽.

그러나 세계대전의 발발로 ‘제2 러일전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짐으로써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대한광복군정부 안의 북벽주의와 공화주의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 출신지역에 따른 파쟁도 급격한 정세변동기에 독립전쟁을 지휘할 사령부로 출범한 대한광복군정부의 효과적 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세계대전의 발발은 한국민족운동에 ‘외교독립노선’을 정립시켰다. 1914년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의 해산으로 중국 상해에 집결한 민족운동자들은 일본의 참전으로 독일의 승전과 중·독 연합에 의한 對日開戰을 전망하면서 전쟁을 국권회복의 기회로 판단했다. 이들은 상해에서 신한혁명당을 결성하고 광무황제(고종)를 당수로 추대, 대한제국의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이들의 구상은 독일정부의 보증하에 중국과 한국 망명정부 사이에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독립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무위로 끝났지만 대한광복군정부가 와해된 뒤 세계대전의 발발을 계기로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독립전쟁론에 외교노선을 접목시킨 사례로 주목된다.⁹⁾

신한혁명당이 추진한 망명정부 수립의 실패는 세계정세에 대한 오판과 북벽주의와 공화주의 등 조직 내부의 정치·사상적 갈등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참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신한혁명당의 붕괴로 국외 독립운동의 구심이 사라지자 국면의 전환이 필요했다. 1917년 7월 상해에서 14명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동단결선언>은 단결의 필요성, 국내동포의 참상, 해외동포의 역할, 선언 당시의 국제환경, 대동단결에의 호소, 그리고 ‘提議의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¹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권불멸론에 의한 국민주권설을 제창했다. 주권은 민족 고유의 것이므로 대내적으로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에게 이를 讓與한 것

반병률, <이동휘와 1910년대 海外民族運動> (《한국사론》 33, 서울대, 1995), 227~228쪽.

9) 李賢周, <1910년대 국제정세와 정부수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89쪽.

10) <大同團結宣言>은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도산 안창호의 유품과 문서에서 나온 자료로 원문이 《韓國學論叢》 9(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7) 끝에 영인, 수록되었다.

으로 인식했다. 둘째 주권상속의 방법으로 “국가상속의 대의를 선포하여 해외동지의 총단결을 주장하며 국가적 행동의 進級的 활동을 표방”했다. 셋째 세계 피압박 민족운동이 고조됨을 예시하면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吾人の 유기적 통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 세계여론을 환기할 것을 주장했다.

〈대동단결선언〉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이를 위한 민족대동의 회의를 제창한 것으로 요약된다.¹¹⁾ 이들은 공화주의에 입각하여 주권불멸론에 의한 국민주권설을 제창하고 대한제국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상속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외 독립운동 단체나 개인으로 민족대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대동단결선언〉의 임시정부 수립론은 1910년대 이래 제기된 임시정부 수립론이 결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동단결선언〉은 주도 인물들이 국외 각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념이 당장에 구현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전쟁 중에 국외 민족운동자들이 국제정세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화정체의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기도했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년 뒤에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1910년대 초 ‘한일합방’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념적으로는 1917년에 이르러 국민주권론에 의거, 공화정을 표방하는 〈대동단결선언〉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2)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1) ‘국민대회’와 국내 정부수립운동

가. ‘국민대회’와 한성정부의 선포

3·1운동 뒤 국내에서 전개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은 향후 민족운동을 이끌어 갈 영도기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족 구성원의 합의라는 절차가 중시되었다. 이런 점에서 국민대회는 합의의 절차로 간주되었다. 즉 국민대회가

11) 조동걸, 〈臨時政府 樹立을 위한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韓國學論叢》9,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7), 131쪽.

갖추어야 할 요건은 국내를 기초로 13도 ‘국민대표’로 조직되어야 하며, 임시정부의 정치형태는 민주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¹²⁾

국민대회를 통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은 3월초부터 李奎甲·洪冕禧(洪震)·韓南洙·金思國 등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申泰鍊(申肅)·安商惠 등 천도교 측의 인물들도 개입하고 있었다.¹³⁾

이들은 ‘비밀독립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수립과 국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 17일에는 현직검사 韓聖五의 집에서 준비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13도 대표자회의를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할 것”을 결의했다. 회합에는 위의 4명 외에도 이교헌·윤이병·윤용주·최진구·이용규·김규·이민태·閔樞 등 준비위원 거의 전원이 참석해 〈국민대회 취지서〉와 〈임시정부 약법〉 등을 작성하고 임시정부 각원, 평정관, 파리강화회의에 출석할 국민대표 명단을 확정했다.¹⁴⁾

그러나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린 13도 대표자회의는 성원 미달로 국민대회를 준비하는 회합에 머물렀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假政府를 만들어 파리강화회의의 및 각국에 조선독립의 승인을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¹⁵⁾

국민대회의 실행은 김사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한남수와 홍면희·이규갑 등이 해외와의 연락을 위해 상해로 망명했기 때문이다. 김사국은 이미 3

12) 《朝鮮獨立新聞》 제2호(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5:3·1運動編, 正音文化社, 1968), 2쪽.

李賢周, 〈3·1운동 직후 ‘國民大會’와 임시정부 수립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울, 1997), 114쪽.

13) 李奎甲, 〈漢城臨時政府 樹立의 顛末〉(《新東亞》 1969년 4월호, 동아일보사), 17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남수·김사국에 대한 신문조서〉(《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재판기록, 1975), 78쪽.

申肅, 《나의 一生》(日新社, 1963), 50쪽.

14) 李奎甲, 위의 글, 176쪽.

〈국민대회취지서〉의 내용은 《이화장소장 우남 이승만문서》 4(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26~27쪽.

15) 〈한남수 및 안상덕 신문조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38~139쪽.

월 중순께 보성전문학교 졸업생인 朱翼의 소개로 明治大에 재학중인 金裕寅을 만나면서 張彩極·金鴻植·全玉珏·李鐵·崔上德 등을 끌어들였다.¹⁶⁾ 김사국·김유인·玄錫七·민강 등 국민대회 지도부는 4월 23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제반 준비를 진행했다. 현석칠과 민강은 〈국민대회 취지서〉·〈결의문〉·〈약법〉·〈선포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서소문동 李敏洪 집 홍제당에서 목판을 새겨 6천장을 인쇄했다.

이들의 계획은 4월 23일 정오에 서린동 춘추관에서 국내 13도 대표자가 모여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노동자를 동원, 종로 보신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문서를 배포한다는 것이었다.

당일 종로 일대에서는 이들 주도로 ‘國民大會’와 ‘共和萬歲’의 깃발 아래 만세시위가 벌어졌고 한성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¹⁷⁾

4월 23일 낮 12시 10분 종로 보신각 부근에서 4~5명의 학생 같은 자가 3本の 小旗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질주하여 종로서 방면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곧 추적하였는데 소기를 종로통에 버리고 관철동 소로로 도망하여 드디어 소재가 불명되었는데 24일 이 5명 중 2명은 체포했다. 소기는 목면제이며 2本에는 國民大會라고 쓰고 1本에는 共和萬歲라고 묵서한 것이다. 4월 23일 경성에서 〈임시정부선포문〉·〈국민대회취지서〉·〈선포문〉이라는 불온인쇄물을 발견하였다. 전항 1부의 행동은 이 선포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묵하 신문중이나 … (《韓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其三, 국회도서관, 1979, 323쪽).

현장에서 주동자가 체포된 데 이어 5월 초에는 지도부를 포함하여 십수명이 검속되었고, 8월 30일 예심 개정 전까지 모두 28명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270여 명에 달했다.¹⁸⁾

주목되는 것은 검거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는 만세

16) 〈김사국 예심조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5), 140쪽.

17) 고정효는 13도 대표자회의와 국민대회 개최사실을 부인하고 있다(高琺焦, 〈세칭 한성정부의 조직주체와 선포경위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97, 199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2, 2000 참조).

18) 《每日申報》, 1920년 2월 2일.

《獨立新聞》, 1920년 2월 12일.

《新韓民報》, 1920년 4월 2일.

시위와 전단의 살포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4월 23일의 국민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김유인·장채극 등은 풍선을 이용한 대규모 전단 살포를 계획, 준비하던 중 장채극 등이 체포되었고 5월 7일 서울 일원에서는 국민대회 당일보다 확대된 규모의 집회가 다시 시도되었다.¹⁹⁾

한성정부의 조직 소식은 국민대회 이전에 중국 신문에 보도되었다. 《天津大公報》(4월 11일자)와 《上海時報》(4월 16일자)는 한성정부의 조직과 각료 명단을 보도했다.²⁰⁾ 뿐만 아니라 한성정부의 성립은 국민대회 직후 尹致昊 등 기독교 세력과 국내 민족운동세력에게 알려지고 서울발 연합통신의 電文에 의해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까지 전파되었다.²¹⁾

그런데 국민대회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민족대표 33인’이 상해에 파견한 대표와의 연락 속에서 태동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감사국의 공판기록에 따르면 이규갑은 상해에 파견된 현순에게서 편지를 받고 3월 중순 경 이것을 한남수와 자신을 설득하여 국민대회의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²²⁾ 玄楯의 마후 역할에 대해서는 윤치호도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²³⁾

현순이 3·1운동 계획에 처음 참여한 것은 1919년 2월 17·8일 무렵 세브란스병원 구내의 이갑성 방에서 열린 회합에서였다. 이 자리에는 이승훈·함태영·안세환·이갑성·박희도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천도교와 공동으로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건의서를 보낼 것, 상해에 대표를 파견하여 열강에 독립을 청원하는 문서를 발송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

19) 〈京城覆審法院 公判始末書, 장채극 신문〉(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 5), 61쪽.

〈韓人이 端午節에 臨時政府組織布告文을 宣布코자 하는데 關한 電報〉, 特第131號, 1919. 5. 9(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其一, 1977), 177~178쪽.

20) 任椿洙, 〈1920-30년대 中國 新聞에 실린 韓國 關係記事 研究〉(《國史館論叢》 90, 國史編纂委員會, 2000), 245쪽.

21) 《尹致昊日記》 7, 1919년 4월 26일.

《新韓民報》, 1919년 6월 12일.

22) 〈三一獨立示威關聯者公判始末書-5〉(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三一運動IX, 1994), 30쪽.

23) 《尹致昊日記》 7, 1919년 4월 26일.

에 따라 상해 파견대표로 현순이 선임되었다.²⁴⁾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즉시 한국을 빠져나가 중국 奉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독립운동가’를 만나 동행하는 것이었다. 현순은 봉천에서 崔昌植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여 3월 1일 상해에 도착했다. 당일 이들은 미국인 선교사 피치(George A. Fitch)의 소개로 선우혁을 만나고 이튿날에는 申圭植·李光洙·金澈·신석우 등 신한청년당계 인사들을 만나 자신들이 “민족독립당(National Independence Party)을 대표하여 연락·선전과 외교를 위해” 상해에 왔음을 밝혔다. 최창식은 <독립선언서>를 소지했고 3·1운동 발발 소식이 연합통신을 통해 3월 4일자 중국신문에 보도되었다.²⁵⁾

이들은 상해 프랑스 조계지 내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 현순은 총무로 뽑혀 상해주재 각국 공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국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현지 언론에 제공하면서 신한청년당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한 김규식 및 미국의 이승만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3월 초·중순 경 현순은 국내의 이규갑에게 편지를 보내 ‘모종의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특별히 이규갑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1919년 1월 이규갑이 전도사로 시무하던 의주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기록이 있어 참고된다.²⁶⁾ 독립임시사무소의 이광수도 현순과는 별도로 3·1운동 지도자들이 남겨놓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봉수를 서울에 파견했다.²⁷⁾

3월 27일 밤 상해 프랑스 조계의 한 예배당에서 상해의 독립운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고기관’을 조직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최고기관의 수립을 서두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순은 “국내로부터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광수도 “독립선언을 하였으니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의사도 듣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를 조직

24) <朴熙道先生取調書>(李炳憲 편, 《三一運動秘史》), 434~435쪽.

25) Soon Hyun(현순), *MY AUTOBIOGRAPHY*(나의 자서전), p.79.

26) Soon Hyun, *ibid.*, p.77.

27) 이광수, <나의 고백>(《이광수전집》 7, 삼중당, 1970), 255~257쪽.

한다면 미국동포들도, 하와이동포들도, 노령에서도, 서북간도에서도 저마다 정부를 조직하게 될지도 모르니 이리되면 우리 독립운동이 분열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서울에 보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²⁸⁾ 현순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규갑은 현순의 편지를 받고 바로 동지 규합에 나섰다. 먼저 정부수립운동을 지휘할 ‘중앙대표’로 이규갑·신태런(신숙)·안상덕·권혁채·홍면희 등 5인이 선정되었다.²⁹⁾ 이들은 실행을 담당할 조직으로 ‘비밀독립운동본부’를 조직했다.

이 무렵 상해로부터 임시정부 조직문제에 관해 “국내의 동의를 얻기 위해” 洪濤(洪鎮義)와 李鳳洙가 파견되었다.³⁰⁾ 이에 5인의 중앙대표는 신숙의 중재로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통합이 결렬되자 5인 중앙대표는 당시 조직중이던 대동단에 주목했다. 대동단은 3·1운동 중 조직되어 의친왕 이강을 상해로 망명시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던 비밀결사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사상과 노선의 차이로 국민대회와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일부가 개인으로 참여하는 데 그쳤다.

남은 문제는 정부형태와 각료의 인선이었다. 국민대회 지도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6, 7일 경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합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정부형태였다. 기독교계 인사들은 공화정체를 주장했고 유림출신 인사들은 대한제국의 회복을 역설했다.³¹⁾ 결국 정부수반과 각료 명칭 등 외형상으로는 후자로 했으나, 실제로는 약법을 통해 공화정체의 틀을 갖추었다.³²⁾

28) 이광수, 위의 글, 254쪽.

29) 李炳憲, 앞의 책, 854쪽.

30) 申肅, 앞의 책, 50쪽.

31) 그러나 이들도 공화정체를 대세로 받아들였다(《省齋遺稿》, 省齋尹履炳先生遺蹟刊行協會, 1959, 14~16쪽).

32) 〈약법〉 제1조 國體는 民主制를 採用함, 제2조 政體는 代議制를 채용함, 제3조 國是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고 世界平和의 韋運을 增進케 함, 제4조 臨時政府는 左의 權限이 有함 ① 一切 內政 ② 一切 外政, 제5조 朝鮮國民은 左의 義務가 有함 ① 納稅 ② 兵役, 제6조 本 約法은 正式國會를 召集하여 憲法을 頒布하기까지 此를 適用함(《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4, 1998, 29쪽).

한성정부의 각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집정관총재 李承晩, 국무총리총재 李東輝, 내무부총장 李東寧, 외무부총장 朴容萬, 재무부총장 李始榮, 차장 韓南洙, 교통부총장 文昌範, 군무부총장 盧伯隣, 법무부총장 申圭植, 학무부총장 金奎植, 노동국총관 安昌浩, 참모부총장 柳東說, 차장 李世永(‘국민대회’ 명의의 〈宣布文〉)(《우남 이승만문서》4, 28~29쪽).

나. ‘경성독립단본부’와 신한민국정부

국민대회 당일 서울 종로 일대에 배포된 문건은 〈임시정부선포문〉·〈국민대회취지서〉·〈선포문〉의 3종이었다.³³⁾ 앞의 두 문건은 국민대회 추진세력이 배포한 것이고 〈임시정부선포문〉은 ‘조선민족대회’의 명의로 배포된 것으로 〈임시정부령〉 제1호와 제2호가 附記되었다.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주체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임시정부선포문〉이 어떤 경위로 국민대회 당일 한성정부 문건들과 함께 배포되었을까. 여기서 이 문건이 1919년 4월 15일 경 평안북도 철산·선천·의주 일대에 살포된 ‘신한민국정부’의 선포문건과 함께 배포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한민국정부 관계 선포문건으로는 〈신한민국정부 선언서〉, 〈각원명단〉, 〈경제적 공약〉, 〈약법〉(미 발견) 등이 있는데,³⁴⁾ 이 중 각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집정관 李東輝, 국무총리 李承晩, 내무부장 (미정) 차장 曹成煥, 외무부장 朴容萬, 차장 金奎植, 재정부장 李始榮, 차장 李春塾, 교통부장 文昌範, 차장 李喜儼, 노동부장 安昌浩, 차장 閔瓚鎬.

이들 신한민국정부의 문건이 4월 23일 국민대회에서 한성정부의 문건을 배포할 때 학생조직에게 전해지고 있음은 흥미롭다. 국민대회 사건으로 체포

33) 〈獨立運動에 關한 不穩文書 發見의 件〉, 1919년 4월 24일, 騷密第783號(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其三), 323쪽.

34)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6:三一運動編二(みすず書房, 1972), 70쪽.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Ⅱ:民族主義運動編(原書房, 1967), 22쪽.

된 이춘균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는 1919년 3월 30일 경 학생조직의 리더인 김유인의 지시에 따라 ‘임시정부에 관한 불온문서’를 수령하러 갔었는지를 추궁했다.³⁵⁾

이춘균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신의주를 갖고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국민대회 당일 시위투쟁의 한 당사자인 장채극이 <임시정부선포문>을 이춘균에게서 받아 김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사의 추궁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이를 부인한 것은 의주에서 자신이 가져온 문건 가운데 국민대회 당일 배포되지 않은 문건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신한민국정부의 <각원 명단>과 <7개조의 약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유인이 이춘균으로부터 받은 문건 속에는 국민대회 당일 배포된 <임시정부선포문> 외에도 신한민국정부의 <각원명단>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전자만 배포하고 후자는 배포하지 않았다. 배포한 문건도 이춘균이 장채극에게 준 것을 김유인이 받아 바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기다려 국민대회 당일에 임박해서야 인쇄,³⁶⁾ 한성정부의 문건과 함께 배포했던 것이다. 이들이 임시정부의 각원 명단을 배포하지 않은 것은 한성정부 추진세력과 신한민국정부 추진세력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었다.³⁷⁾

국민대회 당일 한성정부 선포문건과 별도의 <임시정부선포문>을 배포한 주체가 신한민국정부 수립을 주도한 세력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전단정부가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들은 누구이고, 이들이 국민대회에 개입하는 경위는 어떠한가.

(1919년) 4월 8일 임시관제를 발포하다.

동일 경성독립단본부 姜大鉉은 이동휘를 집정관으로 한 각원명부 및 임시정부헌법 초안을 휴대하고 상해에 도착하다(外務省警察史 支那之部, 《朝鮮民族運動史(未定稿)》 제1권, 고려서림 영인본, 1989, 87쪽; 國史編纂委員會, 《韓國

35) <公判始末書> 4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 23쪽.

36) <覆審公判 公判始末書>, 59쪽.

37) <公判始末書> 5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 34쪽.

申肅, 앞의 책, 50쪽.

獨立運動史 資料4：臨政編Ⅳ》，1968，207～208쪽；桂奉瑀，《朝鮮歷史》卷之三 원고본，1952，67～68쪽).

이 기사는 서울에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한 한성정부가 아닌 이동휘를 집정관으로 하는 다른 정부가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앞서 본대로 3·1운동 뒤 국내에서 선포된 임시정부 가운데 신한민국정부만이 이동휘를 집정관으로 한 정부였다. 따라서 姜大鉉이 상해로 가져왔다는 〈각원명단〉과 〈헌법초안〉은 신한민국정부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강대현이 상해로 가져왔다는 〈각원명단〉이 신한민국정부와 동일한지의 여부이다.

獨立新報 號外 기원 4252년 4월 10일

京城電，昨日 下午 10시에 來한 特電을 據한즉 敬성서 우리 臨時政府가 如左히 組織되앗다더라.

집정관 李東輝, 총리 李承晚, 내무총장 安昌浩, 차장 曹成煥, 외무총장 朴容萬, 차장 金奎植, 재무총장 李始榮, 차장 李春塾, 교통총장 文昌範 [차장 玄楯](《獨立新報》제9호, 1919년 4월 10일, 號外; 日本外務省史料館,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新聞雜誌》, 국사편찬위원회 마이크로필름, 분류번호 4門-3類-2項-2-1-1).

강대현이 상해로 가져온 〈각원명단〉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루어진 각원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獨立新報》호외에 실린 이 각원명단은 4월 22일 북간도에서 발행된 《우리들의 편지》(제12호)에도 全文이 게재되었다.³⁸⁾

문제는 경성독립단본부가 왜 4월 23일의 국민대회가 있기도 전에 서둘러 정부가 수립된 사실과 각원의 명단을 공표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한민국정부의 각원명단과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38)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7, 朝鮮三：獨立運動一(みすず書房, 1970), 51～52쪽.

李智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第28話：北間島 21〉(《中央日報》, 1972년 11월 4일).

강대현이 소지한 경성독립단본부案과 신한민국정부안이 다른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신한민국정부의 내무부장이 공석인 반면 경성독립단본부안은 ‘내무총장’이 안창호로 되어 있다. 둘째 신한민국정부에서 교통차장은 이회경인데 경성독립단본부안은 현순으로 되어 있다. 셋째 신한민국정부는 노동부장에 안창호, 차장에 민찬호인데 경성독립단본부안에는 노동부가 없고 신한민국정부의 노동부장 안창호는 경성독립단본부안에 내무총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강대현이 가져온 경성독립단본부의 〈각원명단〉은 신한민국정부안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신한민국정부에 공석인 내무부장은 후자에 안창호로 補任되고 있으므로 안창호가 부장으로 되어있는 신한민국정부의 노동부는 직제 자체가 폐지된 것이다. 남은 문제는 신한민국정부의 교통차장 이회경이 여기서 현순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과 신한민국정부 각원의 직명이 ‘부장’과 ‘총장’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이춘숙의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신한민국정부와 강대현이 상해로 가져온 〈각원명단〉에 공통적으로 재무(재정)차장에 올라 있다. 더욱이 각원명단의 인물중 국내에 있었던 인물은 이춘숙 밖에 없었다. 그는 국민대회 직전까지 서울에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하고 한성정부 조직을 주도한 이규갑·홍면희·한남수 등에 한발 앞서 상해로 건너간 뒤³⁹⁾ 임시의정원의 성립에도 관여했다. 이 점은 신한민국정부와 경성독립단본부명의를 수립주체가 동일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의 활동은 文昌範·尹海 등 노령지역 민족운동 세력과도 연계되었다. 이춘숙은 이들과의 약속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일본유학생 출신들과 접촉하였고, 洪濤를 표면에 내세워 활동했다.⁴⁰⁾ 홍도는 국내에서 이봉수와 접촉했다. 이봉수는 함남 홍원 출신으로 명치대학 상과에 재학중이었고 홍도와는 명치대학의 선후배 사이였다.⁴¹⁾ 이봉수는 상해와 국내를 오가며 독립임시사무소와

39) 李炳憲, 앞의 책, 1,016쪽.

金東成, 〈祖國光復에 바친 一生—晩悟 洪震先生의 16周忌를 마치고—〉(《京郷新聞》, 1962년 9월 27일).

40) 洪濤는 洪震義의 가명이며 洪鎭義로도 쓴다. 1894년 함경도 함흥 태생으로 명치대학을 졸업했다(〈在外鮮人新運動團體と其中心人物〉1927년 5月條[未定稿], 《齋藤實文書》10: 民族運動二, 고려서림 영인본, 281쪽).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속을 통해 국민대회 쪽과 통합을 시도했다.⁴²⁾

홍도와 이봉수 등은 신한민국정부案을 토대로 홍면희·이규갑 등 국민대회측과 통합, 이를 선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교섭 과정에서 이들은 국민대회의 배후에 현순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교통차장이 이 회경에서 현순으로 바뀐 것은 국민대회쪽을 의식한 결과였다. 각원 명칭에서 ‘부장’이 ‘총장’으로 바뀐 것도 한성정부와 타협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통합 협상은 국민대회 개최일자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한성정부 추진세력은 4월 8일 경에 열 것을 주장한 반면, 홍도는 그 이후를 고집했다.⁴³⁾ 홍도의 주장은 《독립신보》 호외의 보도일자(1919. 4. 9), 혹은 강대현의 상해 도착일자(1919. 4. 8)와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이봉수의 행적도 주목된다. 독립임시사무소의 대변인을 자임했던 이광수는 3·1운동 지도자들이 남겨놓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봉수를 서울에 파견했다. 이봉수는 홍도와 국민대회와의 접촉 직전에 상해로 돌아와 자신은 ‘경성독립단본부’의 파견으로 “가정부를 조직하라”는 사명을 띠고 상해에 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독립임시사무소에서는 이봉수에게 “① (경성독립단) 본부로서 (임시정부를) 조직함이 가한 것과 ② 파리대표에게 신임이 긴급함과 ③ 국민통일 관계로 정부를 속히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봉수를 다시 서울로 보냈다.⁴⁴⁾

그가 다시 서울에 도착한 것은 4월 3일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였다.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확인한 홍도와 이봉수는 4월 8일 이전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홍면희·한남수 등이 국민대회를 4월 8일 전후로 계획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강대현이 ‘경성독립단본부’의 임시정부〈각원명단〉과〈헌법초안〉을 가지고 서둘러 한성정부측보다 먼저 상해로 건너간 것이다. 강대현은 4월 8일에 상해에 도착할 수 있었다.

41) 〈本年度卒業生一覽〉(《學之光》 17, 1919), 81쪽.

〈在日京 우리 留學生界의 消息〉(《學之光》 20, 1920), 62쪽.

42) 申禱, 앞의 책, 39·48쪽.

43) 〈公判始末書〉 5(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 34쪽.

44)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4: 臨政篇Ⅳ, 27쪽.

(2)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

국내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3월 중순 이래 중국 북경과 만주, 특히 노령에서 상해에 온 이동녕·이시영·조완구·조성환·김동삼·조영진·조소앙 등 30여 명에 달하는 원로급 인사들이 상해에 도착하면서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광수의 표현을 빌자면 이들 ‘독립운동의 대선배’들은 “왜 33인만 거드는가. 나라의 범통이 하필 33인에 있는가. 만일 33인이 아무 의사도 남겨놓은 것이 없으면 영영 정부조직을 못하는가”라고 반박하면서 무한정 기다릴바에야 상해를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⁴⁵⁾

임시정부의 조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상해에 집결한 인사들의 노령 니콜리스크에서 결성된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견제와도 관계가 있다. 1월에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한 신한청년당은 연락·자금조달과 운동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여운형을 만주와 노령에 파견했다. 여운형은 노령쪽 인사들을 만나 파리대표 파견문제와 동지 규합, 자금조달, 독립운동의 중앙기관 문제 등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⁴⁶⁾

여운형·이동녕·조완구는 중앙기관은 무력단체가 아니고 외교활동을 해야 하므로 국제도시인 상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창범·남궁선·김립 등은 수십만 동포가 살고 있는 노령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채 노령의 민족운동 단체 대표들은 1919년 2월 25일 대한국민의회 조직을 결의하고 3월 17일에는 독립선언과 함께 그 조직을 선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동녕·조완구·조성환·조영진 등은 북간도를 거쳐 만주의 이시영·김동삼·조소앙 등과 합류하여 상해로 가버렸다. 상해임시정부는 이들의 주도로 성립되는 것이다.⁴⁷⁾

노령과 만주지역 인사들이 상해로 집결함에 따라 독립임시사무소는 중앙

45) 이광수, 앞의 글, 256쪽.

46)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총문각, 1946), 25쪽.

47) 반병률, 〈한인사회당의 조직과 활동(1918~1920)〉(《한국학연구》 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3), 152~153쪽.

기관 수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녕·이시영·조소앙·이광·조성환·신석우·이광수·현순의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8인 가운데 5인이 기호파 인사들이 이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출범시킨 핵심이었다. 최고기관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4월 초 독립임시사무소는 내외 각지에서 상해로 모여든 민족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 후에 임시의정원을 세우기로 결정”했다.⁴⁸⁾

4월 8일에는 강대현이 경성독립단본부로부터 이동휘를 집정관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각원명단〉과 〈헌법초안〉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상해의 민족운동자들 간에는 ‘紛議’가 일어났으며⁴⁹⁾ 같은 날 정부 형태와 임시의회의 기본 골격을 담은 임시관제가 공포되었다.⁵⁰⁾

19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상해 프랑스조계에서 손정도와 이광수의 제의로 ‘각 지방 대표회’가 소집되었다. 회합에 모인 인사는 총 29명이었다.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하자는 조소앙의 동의가 신석우의 제청으로 가결되었고 무기명 투표로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가 선출되었다.

그런데 각 지방의 ‘대표’라고 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했다. 이들 29인 가운데 서울·경기·충청 등 기호지역 출신이 절반에 달했다. 앞서 독립임시사무소에서 최고기관 수립을 위해 구성되었던 ‘8인 위원회’ 전원도 이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뒤에 상해로 들어온 인사들 사이에서 이들 ‘초대’ 의원들의 지역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⁵¹⁾

이튿날에 이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호와 연호를 제정했다. 신석우의 동의와 이영근의 재청으로 가결된 이 국호가 갖는 의미는 민주정체의 국가를 표현하는 ‘민국’의 채택이었다. 나라 이름은 10년 전에 잃은 대한제국을 회복한다는 뜻에서 ‘대한’을 찾아 쓰되 정치체

48) Soon Hyun, *op.cit.*, p.82.

49) 〈獨立運動에 關한 略史〉(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4, 臨政編IV), 207쪽.

50) 外務省警察史 支那之部, 《朝鮮民族運動史》1(未定稿), 87쪽.

51) 李賢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성립과 위상 변화(1919~1922)〉(《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217~218쪽.

제는 군주제를 지양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⁵²⁾

이어 임시관제를 집정관제에서 총리제로 개정하고 국무원을 선출했다. 즉 강대현이 가져온 <헌법원문>과 집정관제 <각원명단>을 토대로 4월 8일에 선포했던 임시관제를 개정, 집정관을 폐지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원을 내지 본부와 합의 선거”한 것이다.⁵³⁾ 임시관제 개정의 핵심은 집정관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직제로 바꾼 것이었다. 다음으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무총리로의 관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원의 인선은 강대현이 소지해 온 원안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각료 명단은 다음과 같다.⁵⁴⁾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재무총장 최재형, 교통총장 문창범, 군무총장 이동휘, 법무총장 이시영, 내무차장 신익희, 외무차장 현순, 재무차장 이춘숙, 교통차장 선우혁, 군무차장 조성환, 법무차장 남형우, 국무원비서장 조소앙.

(3)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이 공포된 뒤 강대현에 이어 이춘숙·홍도·이봉수 등이 상해에 도착해 4월 21일에 개원된 제2회 임시의정원에 합류했다. 임시정부가 성립되자 이들은 한성정부를 구축할 필요를 느꼈다. 회의 마지막 날인 4월 23일에 임시의정원은 “内地에 있는 국민대회에 대하여 임시의정원이 성립되었음을 발표하자고 하는 이춘숙의 동의를 조완구의 제청으로 가결”했다.⁵⁵⁾

52) 윤병석, 《한국사와 역사 의식》(인하대출판부, 1989), 241쪽.

53) <獨立運動에 關한 略史>(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 4, 臨政編 IV), 208쪽.

54) <임시의정원기사록> 제1회집(김정명 편, 《朝鮮獨立運動》II), 32~35쪽. 반병률은 경성독립단본부에서 집정관으로 선임되어 있던 이동휘가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집정관제를 국무총리제로 바꾼 관제개정의 목적이 행정수반을 이동휘에서 이승만으로 교체하려는 것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潘炳律, <大韓國民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2, 지식산업사, 1988, 97쪽).

4월 23일은 서울에서 국민대회가 개최된 날이었고, 한남수를 제외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⁵⁶⁾ 이규갑·홍면희·장봉 등 국민대회 지도부가 상해에 도착한 것은 4월말 경이었다. 이들은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조직되었음을 전했다. 그러나 임시의정원은 상해 임시정부 지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발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⁵⁷⁾

임시의정원은 제4회 회기 중(1919. 4. 30~5. 12)인 5월 3일 한성정부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열고 “4월 23일 경성에서 정한 〈임시정부조직 선포문〉 및 각원의 선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대한민국임시헌장〉·〈선서문〉·〈정강〉 등 임시정부 성립에 관한 인쇄물을 국내에 송부하기 위해 연락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⁵⁸⁾

그러나 주요 각료들이 취임을 유보함으로써 상해 임시정부는 정체상태에 빠졌다. 특히 국무총리 이승만(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과 군무총장 이동휘(신한민국정부의 집정관)의 취임거부는 임시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인 이승만은 이미 미국 워싱턴에 ‘大韓共和國 臨時事務所’라는 한성정부의 간판을 걸고 활동하고 있었다.⁵⁹⁾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와 한성정부 양쪽에서 정부수반에 선임되었으면서도 후자가 국민대회라는 절차를 밟아 성립되었다는 ‘명분’과,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수반의 선출권과 탄핵권을 임시의정원에 부여하고 행정권을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는 국무원에 일임함으로써 자신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했음에 비해 한성정부는 〈約法〉을 통해 독립된 국가로서 정식 국회가 개원될 때까지 정부수반의 절대권력을 보장해 준 ‘실익’ 때문에⁶⁰⁾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직을 수임했다.

55) 〈大韓民國臨時議政院記事錄第2回集〉(《朝鮮民族運動史》1, 未定稿), 154~159쪽.

56) 한남수는 이규갑의 使者로 4월 8일 서울을 출발하여 4월 16일에 상해에 도착하여 현순을 만났으나 이때는 이미 상해임시정부가 선포된 뒤였다(〈한남수예심종결서〉,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140쪽).

57) Soon Hyun, 앞의 책, 83쪽.

58) 〈上海에 있어서의 韓國獨立運動〉(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25~31쪽.

59) 《新韓民報》, 1919년 7월 19일.

60)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臨時憲法 改定過程을 中心으로—〉

이동휘도 사정은 비슷했다.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이 내외에 공포되고 노령과 간도일대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그는 신한민국정부의 ‘집정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일제관헌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4월말 경 노령으로부터 훈춘현 塔道溝에 들어와 대한국민의회 훈춘지부를 설치하는 한편 4월 24일부터 3일간에 걸쳐 회의를 열고 국내 침투를 결의했다.⁶¹⁾

상해 임시정부가 표류하고 있을 때 1919년 5월 외무차장 현순의 안내로 내무총장 안창호가 상해에 도착함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운영의 정상화가 시도되었다. 시급한 문제는 선임된 각료들을 속히 상해에 집결시키는 일이었다. 안창호는 이승만을 이동휘를 취임시키는 일이 사태 해결의 첩경이라고 판단했다. 취임을 요구받은 이승만은 안창호에게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바꿀 것”, “애국금을 폐지하고 오직 공채만을 발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⁶²⁾ 후자에 대해 안창호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전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직함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하는 한성정부를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

한성정부의 수용방침은 이동휘를 상해로 불러오는 데에도 유리했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이지만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다음 가는 ‘국무총리총재’였기 때문이었다.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의 통합협상도 한성정부의 활동에 유리한 명분을 제공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된 뒤 대한국민의회는 원세훈을 파견하여 대한국민의회와 임시의정원을 병합하고 정부의 위치를 노령으로 하자고 제의했었다.⁶³⁾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4월 29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회의를 열어 상해 임시정부를 ‘假承認’하기로 하고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한 뒤 임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916~917쪽.

61)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6 : 三・一運動編二, 154~155쪽.

62) Soon Hyun, *op.cit.*, pp.84~85.

63) 반병률, 〈大韓國民議會와 上海臨時政府의 統合政府 수립운동〉(《한국민족운동사 연구》 2, 1988), 98쪽.

시정부를 노령으로 이전한 다음 행동을 일치할 것을 결의했다.⁶⁴⁾ 대한국민의회는 상설의회 의장 원세훈을 상해에 파견하여 임시정부에 이 같은 결정을 전달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소재지를 노령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한국민의회 쪽 제안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임시의정원은 국민의회의 제안을 심의하기 위한 1919년 5월 13일 제4회 회의에서 장병준·손두환·한위건·장도정·임봉래·홍도 등 6인의 연서로 〈의회 통일에 관한 건〉을 제출했다.

한위건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국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시급히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손두환은 대한국민의회를 속히 임시의정원에 통일시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대한국민의회에 대해 “임시정부로 하여금 3일 이내로 派員 조사한 후 그 사건을 의정원에 제출케 할 것”을 결의했다.⁶⁵⁾

그러나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통합문제는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임시의정원 쪽이 대한국민의회가 소비에트제를 채용, 의회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의 기능까지도 통일적으로 공유한 조직⁶⁶⁾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요컨대 임시의정원은 국민의회와의 통합을 ‘양 의회의 합병론’으로 여겼던 것이다.⁶⁷⁾ 이 경우 임시의정원과 국민의회가 의회 대 의회로 통합해도 상해 임시정부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 점은 1919년 6월 7일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7월 14일에 통과된 제의안을 보아도 분명하다.⁶⁸⁾

대한국민의회는 이 결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한성정부 봉대론’이 급속하게 대두했다. 한성

64) 위와 같음.

65) 〈大韓民國臨時議政院記事錄第4回集〉(《朝鮮民族運動史》1, 未定稿), 49~50쪽.

66) 〈大韓民國臨時議政院記事錄第5回集〉(《朝鮮民族運動史》1, 未定稿), 53~54쪽.

67) 손세일, 앞의 글, 914쪽.

68) 〈大韓民國臨時議政院記事錄第2回集〉(《朝鮮民族運動史》1, 未定稿), 53~54쪽.

정부 쪽의 이규갑은 흥면회와 함께 5월 25일 안창호의 상해 도착으로 국민의회와의 통합운동이 본격화되자 협상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⁶⁹⁾

그 결과 한성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와 국민의회 사이의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양자를 아우르고 이를 통합하는 구심으로 떠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정부 개조안에 합의했다.

- ①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작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 ②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해에 둘 것이니 각지에 연락이 비교적 편리한 까닭이다.
- ③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의 제도와 인선을 작소한 후에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제도와 그 인선을 채용하되, 상해에서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은 그대로 유효를 인정할 것이다.
- ④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하여 설립된 정부의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 ⑤ 현재 정부 각원은 일체히 퇴직하고 한성정부가 선택한 각원들이 정부를 인계할 것이다.⁷⁰⁾

1919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집정관총재 이승만, 국무총리총재 이동휘를 비롯한 한성정부 각원 명의로 〈약법 6조〉까지 첨부, “海港(상해)에서 국민대리총회를 大開하고 국민의 요구와 사업상을 위해 京城에서 조직된 정부를 채용하기로 의결”하는 내용의 〈國務院諭告文〉을 발표함으로써⁷¹⁾ 통합을 공

69) 송남현,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천산산맥, 1990), 34쪽.

이규갑, 앞의 글, 186쪽.

당시 상해의 ‘노령대표’(국민의회)들도 한성정부를 지지했다(이정규, 《又觀文存》, 삼화인쇄 출판부, 1974, 102쪽).

70)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김호, 1956), 458쪽.

71) 〈大韓民國臨時政府國務院諭告〉(국회도서관, 《韓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其二), 743~744쪽. 고정휴는 몇 가지 내용상의 미비점을 들어 ‘국무원유고문’의 실체를 의심하고 있다(高斑焦,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합정부 수립운동에 대한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43~44쪽).

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8월 30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상설의회 총회를 열고 상해 임시정부 쪽 파견원도 참석한 가운데 해산을 선언했다. 임시의정원도 1919년 8월 18일 제6회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 개조 및 임시헌법 개정에 관한 제안〉을 통과시켰다.⁷²⁾

3) 임시정부의 초기활동

(1) 외교·선전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성립 이전부터 외교 활동을 시작하여 한국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열강의 승인과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통합정부가 수립된 뒤에 안으로는 연통제 등으로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꾀하면서 밖으로는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 등의 국제기구와 중국·미국·소련 등에 대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했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정부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대한민국 주 파리위원으로 임명하고 신임장을 발송했다.⁷³⁾ 이에 김규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로 주 파리위원부를 구성하여 이관용을 부위원장에, 황기환을 서기장에 임명하고 프랑스정부와 각국 원수에게 신임장을 발송했다.

파리위원부는 국내 및 시베리아·하와이·미국·멕시코에 살고 있는 1,870만 명의 한국인 및 세계대전 당시 유럽 동부전선에 참전했던 5천여 명의 한

72) 그러나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개조안은 ‘승인·개조분쟁’으로 국민회의의 거부
에 직면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해한 통일안은 임시정부만을 해체하고 한성정
부의 각원대로 개조함을 뜻하는 것이지, 임시의정원의 해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국민회의 쪽이 이해한 통일안은 임시의정원과 국민회의의 동
시해산→한성정부 승인→신국회의 구성이었다. 그러므로 국민회의의 입장에서
임시의정원이 해산은커녕 임시헌법 개정과 임시정부의 개조를 단행한 것은 ‘불
법’이었다. 1920년 2월 15일 국민회의는 상해임정의 ‘약속위반’을 비난하며 재건
을 선언했다(반병률, 앞의 글(1988) 참조).

73) 〈獨立運動에 關한 略史〉(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4, 臨政編
IV), 208쪽.

국인 명의로 된 〈獨立控告書〉를 프랑스 내각수반이자 강화회의 의장 클레망소(G. Clemenseau)에게 제출했다. 또한 이사회 회원들과 로이드(Lloyd George) 영국 수상, 이태리 수상 등 각국 국가원수들에게도 발송했다. 5월 24일에는 클레망소에게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서한을 발송하여 강화회의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임시정부 대표인 김규식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도 요청했다.⁷⁴⁾

그러나 강화회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파리위원부는 6월 11일 다시 서한을 보내 강화회의가 한국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한국 문제에 관해 대표단의 발언을 청취할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6월 14일과 16일에는 강화회의 참석차 파리에 와있던 영국의 로이드 수상과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파리위원부의 집요한 요청에 대해 강화회의 측은 사무총장 두사다(Dusata)와 화이트(White) 명의로, 한국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화회의에서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곧 창설될 국제연맹에서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파리강화회의가 끝나기 전날인 6월 27일에 파리위원부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명의로 평화조약에 대해 무책임함을 사무국에 통고하고, 클레망소 의장과 윌슨 대통령에게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⁷⁵⁾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강화회의 자체가 본래 전승국인 열강들의 이권도모를 위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약소민족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파리강화회의는 강대국간 전후 처리문제만 거론하고,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토론도 없이 6월 28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파리위원부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던 한국문제가 국제여론화된 것이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6월 30일 미국대표단을 상대로 한국문제를 설명하였고, 7월 28일에는 프랑스 동양정치연구회에서 한·중 양

74) 鄭用大,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파리강화회의 및 유럽 외교활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234쪽.

75) 전보의 내용은 정용대 편,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I (국가보훈처), 307~308쪽.

국문제에 대한 연설회를 개최했다. 7월 30일에는 프랑스 국민정치연구회에서 한국문제보고회를 가져 많은 호응을 얻었고, 31일에도 동양정치연구회에서 제2차 한국문제 연설회를 개최했다.⁷⁶⁾

파리위원부의 활동은 1919년 8월 9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주의인터내셔널 대회에서 〈한국민족독립결정서〉가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민족은 각자의 운명에 대한 주체자로서 실질적인 국제연맹의 설립을 통해서 자유로운 민족발전과 지속적인 세계평화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피압박 민족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기로 규정한 인터내셔널의 결정에 따라서 ‘루체른’의 국제사회주의자대회는 민족자결의 견지에서 한국민족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에 대한 일본정부의 야만적인 폭력과 압제에 대하여 항의한다. 同 회의는 이민족의 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스러운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한국의 요구를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동 회의는 국제연맹에 한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독립신문》, 1919년 10월 28일).

이는 한국독립 요구가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인정된 성과로 주목된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국대표단의 일원인 조소앙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제2차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다시 〈한국독립문제 실행요구안〉을 제출했다.⁷⁷⁾ 이에 따라 브뤼셀의 국제사회당본부는 이듬해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승인하도록 국제연맹과 열강에게 요구했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뒤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중국과 미국·소련 등 개별 국가에 집중되었다. 외교활동의 방향도 점차 선전과 여론환기에서 나아가 군사부문으로 확대해 갔다. 그러나 역량을 총 집중시킨 1922년 워싱턴 군축회의(태평양회의)에서도 한국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음으로써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은 시련에 봉착했다.⁷⁸⁾

76) 駐 파리위원부 선전국, 《歐州의 우리 事業》(1922년 12월) 참조.

77) 《독립신문》, 1920년 4월 8일.

78) 임시정부의 對 태평양회의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李炫熙, 《大韓民國臨時政府史》(집문당, 1982), 124~149쪽.

(2) 국내조직과 활동

가. 연통제의 시행과 운영

임시정부의 존립을 위한 절실한 과제는 국민적 기반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부의 통합에 노력하는 한편 성립 직후부터 국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에 연통부와 교통국, 1920년에는 선전대를 설치하면서 국내 조직의 기반을 넓혀 나갔다.⁷⁹⁾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비밀 국내 통치제도로 내무총장 안창호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지지 기반이 국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해와 국내를 연결할 수 있는 행정·통신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특파원의 파견이었다.⁸⁰⁾

안창호의 후임으로 내무부장에 선임된 이동녕이 1920년 12월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고한 한 문건은 특파원의 국내파견 목적에 대해 “연통제 施設, 선전 및 시위운동, 내외지의 종교·단체 및 유력가 연락” 등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⁸¹⁾ 즉 1919년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특파원의 국내 파견은 연통제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통제는 상해에서 국내로 밀파된 특파원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조직·시행될 수 있었다.

임시정부는 국내에 연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국외의 한인사회에 대해서는 1920년 3월 16일 국무원령 제2호로 <임시거류민단체>를 공포하여 한인사회를 통합하려 했다. 원래 연통제가 출범할 당시에는 상해의 한인사회와 서북간도, 노령 연해주 등 국외지역에도 국내와 동등하게 연통부를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처음의 의도대로 국외에까지 연통부가 확대 설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통제는 1919년 7월 10일 대통령 이승만과 내무총장 안창호의 이름으로 발표된 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 <임시연통제>가 공포되면서 출범했다. 그

79) 張錫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독립운동-1920년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1999), 320쪽.

80) 朴敏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시행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338쪽.

81) <內務部經過狀況報告書>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7, 1998), 10~11쪽.

뒤 통합 임시정부의 성립으로 1919년 9월 11일 안창호가 노동국총관으로 선임되고 이동녕이 내무총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이동녕이 10월 27일에야 북경에서 상해에 도착해서 집무를 시작했으므로 초기 연통제의 운영은 안창호가 주도했다.

도·군·면에 따른 〈임시연통제〉의 직제는 안창호가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조직한 신민회의 조직원리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의 총책인 총감독 아래에 각 도에는 도총감, 군에는 군감을 두었던 신민회의 직제는⁸²⁾ 곧 임시연통제에서 각 도마다 부의 책임자로 감독을 두고, 군에는 총감, 면에는 사감을 두는 것으로 그 조직원리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⁸³⁾

〈임시연통제〉는 1919년 12월 1일 〈임시지방연통제〉로 개정·시행되었다. 개정된 〈임시지방연통제〉에서는 지방 행정단위를 道·府·郡·面으로 통일적으로 완비했다. 이 때 임시정부는 전국 행정구역을 총 13도 12부 215군으로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연통제가 실시된 곳은 1920년 말 현재 9개도, 1개 부, 45개 군에 지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연통 각 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지역은 안창호의 지역기반과 관련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일부에 국한되고 있었다.

반면에 경기 이남의 삼남지방에는 연통제가 실시되지 못하거나 시행되더라도 한정된 지역에 불과했다. 특히 경상남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연통제의 실시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독판이 임명된 기록 외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고 경기도 지역도 독판과 인천부 府長을 임명한 사실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남부 지방 가운데 충청북도 만큼은 충주·제천·괴산·보은·청주·단양 등지에서 연통제 직원이 다수 임명된 점으로 보아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⁴⁾

82)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回復運動研究(上)〉(《韓國學報》8, 일지사, 1977), 48~49쪽.

83) 주요한, 《安島山全書》上(법양사, 1990), 206쪽.

84) 박민영, 앞의 글, 356쪽.

연통제를 시행한 목적은 비밀 행정조직을 통해 국내 통치력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연통 각 부는 임시정부에서 발표하는 법령이나 기타 각종 공문의 전파를 비롯하여 독립전쟁에 대비한 군인정보라든가 군수품의 조사, 그리고 시위투쟁의 준비 및 주동, 애국금의 각출, 통신연락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임무를 수행했다.⁸⁵⁾

그러나 연통제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그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연통제가 비교적 활발하게 기능하던 평안도와 함경도는 탄압의 정도가 더욱 심했다. 1919년 7월 연통제 시행 이후 1920년 말에 이르러 조직의 대부분이 와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경남도과 경기도, 충청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연통제의 명맥은 1921년 말까지 유지되었다.

나. 임시교통국의 설치와 운영

임시정부는 연통제의 시행과 더불어 국내외 동포를 대상으로 정부수립과 독립사업을 선전하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나 개인들과의 연락·접촉을 위해 특별기구로 교통부 산하에 임시교통국의 설치를 계획했다. 이와 관련하여 1919년 5월 12일 제4회 의정원회의에서 내무차관 조완구가 “교통부에 안건한 기관 4개”를 둘 것이라는 시정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 4개의 기관이 임시교통국으로 판단된다.⁸⁶⁾

임시정부는 1919년 5월 교통부 안동지부를 안동현 舊市街 興隆街의 영국국적의 아일랜드인 쇼우(George L. Show)가 경영하는 怡隆洋行 2층에 설치하고 책임자로 교통차장에 임명되었던 평북 정주 출신 孔南海를 파견했다. 임시정부는 8월 20일 국무원령 제2호 <임시지방교통사무장정>을 공포함으로써 임시교통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局的 위치를 교통총장이 此를 定”하고 임시교통사무국은 교통부의 郵傳사무와 내왕인원의 接際 사무를 겸장하고(제1조), 직원은 국장 1인, 참사 2인, 서기와 통신원 약간명을 두도록 했다(제2조).⁸⁷⁾

85) 《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編 其二(국회도서관, 1978), 649~651쪽.

86) 尹大遠,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分화(1919~1930)》(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75쪽.

임시교통국의 설치 목적은 국내와의 통신연락 및 상해와 국내를 내왕하는 인사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있었다. 또한 관할구역을 연통제에 준하게 함으로써 임시교통국 지부들은 분리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구를 연결하는 기능도 함께 갖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임시교통국은 독립자금 모집에도 관여했다.⁸⁷⁾

안동현 교통지부는 국내 거점으로 의주군의 舊 의주 성내에 北區 교통국을, 古館面에 남구 교통국을 확보하고 그 밑에 11개의 교통소를 두어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일부까지도 관할했다.⁸⁸⁾ 그러나 임시정부는 1919년 10월 17일 안동 교통지부의 명칭을 임시안동교통사무국으로 바꾸고 관할구역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원으로 국한시켰다.

임시정부는 1920년 1월 13일 <임시지방 교통사무국 장정>을 개정했다. 달라진 점은 “교통총장이 임명하던 국장·지국장·참사를 교통총장의 保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인데,⁸⁹⁾ 이는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으로 국무총리제가 대통령제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직도 사무국에 국장 1인, 참사·서기·통신원 약간 명을 두고, 지국에는 지국장 1인 및 참사·서기·통신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체계를 한층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시정부는 사무국과 지국의 확대에 노력한 결과 1922년 4월까지 임시안동교통사무국을 비롯하여 강변8군 임시교통사무국, 임시함남교통사무국, 평양·황해도·경성교통사무국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국내는 서울을 제외한 한강 이남지역에는 교통국이 설치되지 못했다.

각지에 설치된 교통국은 교통원을 통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선언문이나 지령, 《독립》 등을 국내에 배포하는 한편, 국내의 사정을 임시정부에 보고하고 각지에서 모은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江南公司’로 위장한 임정이 중국 우편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이통양행으로 보내면 안동교통사무국에서 이것을 마대에 넣어 중국인을 이용하여 압록강 상류를 통해 은밀하게

87) 《독립》, 1919년 8월 21일, 〈國務院布告令〉.

88) 윤대원, 앞의 책, 76쪽.

89) 《朝鮮民族運動年鑑》, 1919년 7월 30일.

90) 《독립》, 1920년 2월 3일.

의주지국으로 보내 국내에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임시안동교통사무국은 1920년 1월 23일과 1922년 8월 8일 등 두 차례에 걸친 일제의 침탈로 와해되고 말았다.⁹¹⁾

국내지역은 평양지국의 활동이 활발했다. 1919년 7월 목사 鄭晉鉉에 의해 설치된 임시교통국 평양지국은 대한국민회 및 대한독립청년단 등과 결합하여 “假政府(임시정부)의 명령 및 제 정보를 鮮內地에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비밀결사 및 기타 동지들에게 전달하고 상해에 통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임시교통국 평양지국과 평양의 청년단이 연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했다.⁹²⁾

한강 남쪽을 관할하는 경성교통국은 1919년 11월 이래 황해도 사리원지국과 연락하며 상해에서 오는 문서 및 《독립신문》등을 각지에 배포하고 독립공채를 발매하다가 1920년 8월에 10여 명이 체포되었다. 임시함남교통사무국도 1921년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경계가 심하여 지국의 사무소가 빈번하게 이동하고 북청·단천의 지국장들이 사살, 체포되면서 침체되었다.⁹³⁾

안동과 국내에 설치된 임시교통국은 상해의 중앙정부와 국내외 각지와 의 통신연락 및 문서·지령의 전달, 군자금 모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일제에 침탈되면서 1921년 이후에는 각지에 겨우 통신원 수명을 배치할 정도로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는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1922년 말 이후 임시정부가 침체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3) 군사외교와 독립전쟁 준비

가. 군사외교의 강화

1919년 6월 파리강화회의가 종결되면서 세계사의 주요 무대는 유럽과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많은 이익을 획득했지만 일본도 독일이 원래 중국의 산둥에서 가졌던

91) 李延禧, 《大韓民國臨時政府 30年史》(국학자료원, 1999), 123~126쪽.

92) 《朝鮮民族運動年鑑》, 1919년 11월 4일.

93) 蔡永國,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의 설치와 활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 1999), 373쪽.

권리와 태평양의 적도 이북의 섬들을 차지함으로써 극동과 태평양에서의 우세를 굳혔다.⁹⁴⁾

반면에 전후 합법적인 세계규모의 자본팽창을 위해 국제연맹의 구조 속에 영·불의 대륙세력을 끌어들이려던 미국의 기도는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방향을 바꾸어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때문에 미국은 전쟁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지역에 대한 독점정책을 강화하려던 일본과 대립할 조짐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파리강화회의에 실패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고무시켰다.

연해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소련과 일본군 사이에 조성되고 있던 적대관계도 임시정부에게 희망을 갖게 했다. 1917년 11월혁명으로 모스크바에 새로운 권력을 수립한 소비에트정부가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노동계급에 대해 반전·반정부투쟁을 벌일 것을 선동하며 각국에 혁명을 조장하자 연합국은 대응책으로 무력간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연합국 가운데 무력 간섭군을 가장 먼저 파견했다.

1920년대 초 미국과 일본, 소련과 일본 사이에 전개된 극동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임시정부는 이들 사이의 대립관계 형성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호기로 판단했다. “俄日戰·美日戰은 기정의 사실이며 다만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었다.⁹⁵⁾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열강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했다.

먼저 임시정부는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적극 모색했다. 임시정부는 1920년 시정방침에서 “중국외교단을 편성하고 중국 남북정부, 각 省長 및 督軍과 교섭하여 중국으로부터 我民國의 정치행동과 군사준비에 편의를 얻도록 꾀하며 중국사관학교에 我國靑年을 입학케 하여 我民國과 중국이 연합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로 확정했다.⁹⁶⁾ 임시정부는 黃永熙 등을 외무부 임시선전원으로 임명하여 사천·운남 등에 파견하고 중국의 주요 반일인사 및 단체와 교섭하여 한중공동전선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임시정부의 민간외교를 통한

94) 양소전,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독립운동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76쪽.

95) 《독립신문》, 1920년 3월 16일.

96)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국회도서관, 1976), 111쪽.

한중제휴 노력은 중국 각지에 中韓互助社를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1921년 9월 국무총리 대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이 광동의 護法政府로부터 사실상의 정부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미일전쟁설에 고무된 임시정부는 대미외교도 한층 강화했다. 대미외교는 1919년 8월 워싱턴에 설립한 대통령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1920년 대미외교는 파리강화회의가 끝난 뒤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연맹회의에 대비한 선전사업에 집중되었다.⁹⁷⁾ 1920년 7월 미국의원동양시찰단이 중국·조선·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임시정부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을 실행에 옮겼다.⁹⁸⁾

임시정부는 이어 미국의원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때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이들에 대해 환영의 태도를 표하며 시위운동을 하게 하고 관공리 퇴직과 납세의 거절, 소송의 거절 등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이들 의원단이 방문했을 때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만세시위운동, 관공서 폭파 등이 계획되거나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다.⁹⁹⁾

초기 임시정부 외교정책의 특징은 대소외교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데 있었다. 대소외교는 1919년 11월 한인사회당의 당수인 이동휘가 국무총리에 취임하고, 특히 1920년 초 연합국의 대소 간섭군의 일원으로 시베리아 및 연해주에 파견된 일본군과 적위군과의 사이에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본격화되었다.¹⁰⁰⁾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1920년 3월 “露國외교에 적당한 인원을 선발하여 노국 내정을 주찰하고 유력한 기관에 교섭하여 군기와 군수품의 공급과 我 민족이 일본과 개전할 때에 후원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¹⁰¹⁾ 대소외교

97) 高珽休, 〈歐美駐節韓國委員會의 초기조직과 활동〉(《歷史學報》 134 · 135, 1992) 참조.

98) 《도산일기》, 1920년 8월 16일.

99) 朴永錫, 〈1920年代의 美議員團 來韓과 民族運動의 動態〉(《日帝下 獨立運動史 研究》, 일조각, 1984) 참조.

100) 尹大遠, 앞의 책, 145쪽.

101)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국회도서관), 111쪽.

의 핵심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전쟁에 필요한 무기 및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의 교섭문제는 모스크바 파견원 선정에서부터 마찰을 빚었다. 그것은 국무총리 이동휘가 1920년 1월 22일 국무회의의 결정을 무시하고 한인사회당 당원인 한형권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 파견원으로 결정된 여운형은 여러 차례 안창호를 만나 자신을 모스크바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동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¹⁰²⁾

이동휘와 구상은 달랐지만 대소외교를 중시한 것은 안창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1920년 1월부터 홍사단과 《독립신문》 등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던 단체와 매체를 통해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장차의 독립전쟁에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염두에 둔 전술적인 행동이었다. 1921년 초에 이르러 그는 한·중·러 3국의 반일연맹론, 3국의 연합 최고기관론을 제기했다.¹⁰³⁾ 그의 이른바 독립전쟁 준비론이 한·중·러 연맹론으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1921년 이래 임시정부의 대소외교 정책은 이동휘가 임시정부를 탈퇴하고 내부의 친미외교론과 반사회주의적 성향에 부딪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나. 독립전쟁 방침과 군사제도의 정비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통합정부는 승인·개조문제로 대한국민회의의 반발에 부딪쳤지만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그의 오랜 세력기반이며 1910년 이래 독립군의 근거지중 하나인 북간도와 길림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북간도 대한국민회는 1919년 11월 통합정부가 성립되자 “정부의 승인을 得”한 북간도의 통일기관임을 자처하며 북간도 선출 의정원 의원으로 계봉우와 유례균 2명을 상해에 파견했다.¹⁰⁴⁾ 북간도의 군정부도 1919년 12월 임

102) 《도산일기》, 1920년 1월 26일.

103) 이애숙, <상해 임시정부 참여세력의 대소(對蘇)교섭>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1999), 26쪽.

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군정서(북로군정서)로 명칭을 바꾸고 임시정부를 봉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노령에 주둔해 있던 대한독립군도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했다. 서간도의 독립운동 단체들도 차례로 임시정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3·1운동 직후 군정부로 통합된 서간도의 무장세력들은 군정서(서로군정서)로 개칭하고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되었다.

1920년 1월 교민단에서 열린 신년회 축하자리에서 안창호는 ‘우리 민족이 斷定코 실행할 6대사’라는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독립전쟁 방침을 선포했다. 그는 ‘6대사’로 군사·외교·교육·사법·재정·통일을 들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로서 우리의 당면 대문제는 전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의 기치하에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훈련을 실시하며 외교도 독립전쟁 준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¹⁰⁵⁾ 핵심은 당장의 독립전쟁보다는 이에 필요한 군사·무기·자금 등의 준비를 강조하는 ‘독립전쟁준비론’이었다.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은 1920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동휘가 임시의정원에서 밝힌 시정방침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持久하기” 위해 정부가 실행할 14개항의 준비를 제시했다. 군사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조사·소집하고, 노령과 중령 각지에 10만 명 이상의 의용병 편성을 위해 병사를 모집 훈련하며, 이미 성립한 군사기관을 조사하여 군무부에 예속케 할 軍士私團을 조사하고, 중·노령과 정부 소재지에 사관학교를 설립하며,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과 군수물자 수입을 교섭한다는 것이었다.¹⁰⁶⁾

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5일 <대한민국임시관제>를 공포하여 임시대통령 직할기관으로 대본영·참모부·군사참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비서·육군·해군·군사·군수·군법의 6국을 가진 군무부의 조직과 직무를 8조 29항으로 명문화하여 군사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기능에 대한 성문화를 완료했다. 12월 18일에는 군무부령 제1호로 <대한민국육군임시관제>를 발표하여 독립

104) 《朝鮮民族運動年鑑》, 1919년 11월 26일.

105) 《독립신문》, 1920년 1월 8·10일.

106)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국회도서관), 107~111쪽.

전쟁시 기본병력이 될 육군의 편성 및 관제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¹⁰⁷⁾

1920년 2월에는 노령과 중령지역 관할을 위해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가 마련되었다. 독립군 모집에 적용될 군구제는 서간도군구·북간도군구·강동군구(노령지역)로 나누고, 이곳의 사무는 임시지방사령관이 겸임하도록 하며, 독립군에 응할 중령과 노령거주 한인의 병역의무를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규정했다.¹⁰⁸⁾

이와 함께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상해에서 초급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에 따르면 입학자격은 중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로 제한했으며, 교장·부관·교관과 함께 교관이 겸직한 학도대장·학도대부관·학도대 중대장·학도대 구대장이 학생을 통솔하고 12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친 뒤 졸업생은 參尉에 임명하도록 했다.¹⁰⁹⁾ 이 무관학교는 1920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43명의 사관을 배출했다.

군사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대한민국육군임시관제>에 따른 국민군 편성방침에 따라 각지에서 18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군적 등록사업이 진행되었다. 상해에서는 2월 중순 군적등록 사업을 專任받은 애국부인회가 사람들을 심방하여 군적등록을 권고했고, 군적은 갑과 을의 두 종류로 나누어 갑종은 매일 1시간 이상, 을종은 매주 2시간 이상 군사교련을 받도록 했다.¹¹⁰⁾ 군적등록을 일차 완료한 상해에서는 1920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각원들도 포함된 갑종 40명, 을종 백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군 편성식을 거행했다.

다. 재만독립군과의 관계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임시정부와 서간도 독립군 단체의 통일 및 연대노력이 구체화되었다. 윤기섭 등 95명은 1920년 2월 9일

107)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국회도서관), 132~139쪽.

108)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국회도서관), 139~141쪽.

109)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국회도서관), 140~143쪽.

110) 《독립신문》, 1920년 2월 14일.

부터 4일간 ‘재만국민대회’를 열고 “세계가 우리에게 동정하고 우리 행동만 주목한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외국이 독립을 승인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하루라도 속히 開戰하기를 주장한다”고 하여 혈전개시를 광복사업의 대방침으로 채택했다.¹¹¹⁾ 이어 “적당한 기한 안에 혈전을 단행하되 血戰辦備의 책임은 본회와 당국(임시정부)이 공동 부담하며 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시정부도 서간도와의 협의를 위해 1920년 5월말 경 조상섭을 파견했다. 그러나 서간도 쪽의 혈전방침과 안창호의 ‘준비론’이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양자의 공고한 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서간도 쪽은 준비론을 비판하며 군사활동의 중요성과 이에 소요될 재정의 확보를 강조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드러낼 뿐이었다.¹¹²⁾ 뒤에 서로군정서는 1921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군사통일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족회와 서로군정서를 산하에 편입시키는 데 실패한 임시정부는 安東의 대한청년단연합회(‘연합회’로 줄임)와의 연대를 적극 모색했다. 연합회는 전부터 임시정부를 지지했고 안동 임시교통사무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연합회는 임시정부의 지원하에 결사대적 군사기관으로 ‘의용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¹¹³⁾

그런데 이 계획은 임시정부 군무차장 김희선과 안창호가 연합회 간부들과 논의하여 서간도의 독립단과 청년단이 연합하여 광복군을 조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¹¹⁴⁾ 이에 따라 1920년 7월 초 이탁을 사령관으로 하고 임시정부 군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사기관으로 광복군총영이 안동에 설치되었다. 아울러 임시정부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비밀결사 의용단을 조직하고, 상해로 온 金錫瓚을 설득하여 국내의 의용단도 광복군총영에 귀속하도록 했다. 결국 임시정부와 서간도 독립군단체와의 연대는 이 지역의 대표격인

111) 《독립신문》, 1920년 3월 25일.

112) 韓相禱,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초기 軍事活動과 在滿獨立軍〉(《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749쪽.

113) 윤대원, 앞의 책, 181~182쪽.

114) 《도산일기》, 1920년 6월 16일.

한족회와 서로군정서를 끌어들이는 데 실패함으로써 부분적 성과를 얻는 데 그쳤다.

한편 임시정부와 북간도 독립군단체와의 연대는 극심하게 대립된 북간도 독립군 단체 사이의 통일문제와 맞물려 추진되었다. 북간도 독립군단체의 분열이 표면화한 것은 1919년 11월에 대한국민회가 임시정부가 승인한 북간도의 유일단체임을 내세워 북간도 최고기관임을 자처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회장 구춘선 명의로 <告諭文>을 발표, 경쟁관계에 있던 군정부(북로군정서)를 배격할 것을 선언하고 자신들이 북간도의 최대 조직이자 최고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이후 전개될 북간도 각 단체의 통일을 주도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북간도 지역에 대한 군사 및 재정 등 제반 독립사업을 주도하고자 했다.¹¹⁵⁾

대한국민회의 이러한 행동은 특히 경쟁단체인 군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1920년 2월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은 국무총리 이동휘 앞으로 申請書를 보내 ‘無垢捏造’한 대한국민회의 <고유문>을 《독립신문》에 게재한 것을 비난하고 정부위원의 과견을 요청, 임시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¹¹⁶⁾ 5월말 경 내분의 수습을 위해 임시정부는 안경근과 왕삼덕을 북간도에 파견했다.

임시정부 파견원의 중재와 협의 끝에 양대 조직은 1920년 7월 20일 통일을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군사 양 기관을 특설하고 행정기관은 대한민단, 군무기관은 東道軍政署 및 東道獨立軍署로 칭하기”로 했다. 즉 민단은 북간도 한인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민심의 지도, 대외교섭 사무 등 일체의 행정사무를 통할하고, 조직으로 중앙과 동서남북부의 5부를 설치하며, 단장에 대한국민회 회장 구춘선, 부단장에 서상룡을 선출하고, 임시정부의 간도파견원 이용을 민단고문으로 하여 임시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군무기관으로 북로군정서를 동도군정서로 개칭하여 署長에 서일, 사령관에 김좌진을 임명하여 4개 대대를 편성하며, 흥범도의 督軍部를 동도독립군서로 개칭

115) 《독립신문》, 1920년 1월 8일.

116) 《독립신문》, 1920년 4월 22일.

하여 홍범도가 저장과 사령관을 겸임하고 안정근이 군무기관의 고문이 되어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도록 했다.¹¹⁷⁾

북간도는 서간도와 달리 몇 차례의 회의와 정부 파견원의 중재로 임시정부 산하의 민사·군사 두 기관으로 통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사기관의 성격이 강한 대한국민회가 사실상 민단을 장악하고 군사기관도 단일기관이 아닌 홍범도 부대와 북로군정서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각 단체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위에서 갈등을 임시로 봉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러한 성과마저 1920년 10월의 간도사변에서 임시정부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북간도의 주요 독립군 단체들도 견고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막대한 타격을 입고 노령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이동휘와 노동국총판 안창호의 사퇴와 각처에서 대대적 개편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소집 요구에 직면했다.

〈李賢周〉

2.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1) 국민대표회의 소집론과 ‘정부옹호파’의 반대운동

(1) 국민대표회의 소집배경과 참가세력

1923년 1월에서 6월 초까지 5개월 넘게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는 국내외 각지의 거의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참가한 최대의 민족대표회의였다.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는 그 해 9월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 통합정부로 거듭나면서 독립운동의 최고 구심점으로서 기대

117)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394~395쪽.

를 받았다. 그러나 임정은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내부 분열과 임시대통령 李承晩의 독선, 기호파와 서북파의 지방열 등이 겹쳐 그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한때 국무총리 李東輝와 노동국총판 安昌浩, 젊은 차장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 임정을 강화하려던 노력마저 실패하고 그 동안 임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이동휘·안창호 등이 1921년 초 임정을 떠나면서 임정은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했다. 국민대표회의는 이러한 임정의 위기와 독립운동 진영의 분열을 극복, 새롭게 통일해야 할 필요성에서 제기되었고, 그것은 1921년 2월 상해에서 朴殷植·元世勳·왕삼덕 등 14명이 발표한 〈우리 동포에게 고함〉을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박은식 등은 애초 임정을 조직할 당시 각 방면의 여러 의견을 구하지 않고 몇 사람의 擅行으로 신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복잡한 계급과 방만한 제도를 설정하여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전국민의 의사에 의한 통일적인 강고한 정부조직과 독립운동의 최량의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대표회 소집을 요구했다.¹⁾ 이 선언에 참여한 14명은 대체로 임정 수립 초기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임정의 독립운동 노선과 내분에 반대하여 임정 외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국민대표회 소집 요구는 북경, 만주에서도 이어졌다. 반임정 세력의 근거지였던 북경에서는 朴容萬·申采浩 등이 1921년 4월 군사통일회의를 열어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4월 27일 이것을 임시의정원에 직접 전달했다. 5월 6일에는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도 액목현에서 회의를 열고 위임통치를 청원한 李承晩의 퇴거와 임정개조를 요구하는 5개항의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것을 서간도 출신 의원이자 의정원 의장이던 尹琦燮에게 전달했다.²⁾ 이 회의를 주도했던 呂準·李洙·金東三·李震山 등은

1)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1976), 276~277쪽.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1973), 516~517쪽. 1921년 5월 6일 만주의 액목현회의에서 결의된 5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間西代議士를 소개하여 임시의정원에 향하여 정부 개조의 필요를 제의케 할 일, ②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확실한 이상 그 행위의 주창자에게 퇴거를 명할 일, ③ 의정원에 제출한 개조안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현재 間西의원을 소환할 것, ④ 위안안의 결정 전에 본 기관 대표 명의로 정부를 파괴하려는 제3 단체의 참가를

그 동안 임정을 지지했던 인사들이란 점에서 이 결의서는 임정에 큰 타격이 되었다.

임정 외곽에서 국민대표회 소집론이 강력히 대두되는 가운데 1921년 5월 12일 상해에서도 국민대표회 소집을 요구하는 연설회가 열렸다. 연설회에서呂運亨은 임정 자체 내에서의 임정 개조는 공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규가 극에 달한 시국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대표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창호도 정부를 세울 때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고 임정을 더욱 견고한 민족적 통일기관으로 만들려면 국민대표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상해·북경·만주 등지에서 제기된 국민대표회 소집론의 밑바닥에는 공통적으로 현재의 임정은 더 이상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비판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애초 임정을 조직할 당시 각 방면의 여러 의견을 구하지 못하고 소수인의 擅行으로 성립되어 임정 성립 그 자체에 한계가 있고, 둘째는 임정의 직위와 제도가 실제 독립운동에 적합하게 조직되지 못하여 스스로 불필요한 내부 분열만 낳았고, 셋째는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주장한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상해에서 국민대표회 소집을 요구하는 제1차 연설회가 있는 지 1주일 뒤인 1921년 5월 19일에 열린 제2차 연설회에서는 20명의 상해 국민대표회기성회 조직위원을 선거하고, 그 자리에서 상해 국민대표회기성회(이하 상해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이어 7월 16일부터 상해와 북경 양측 대표가 국민대표회의를 9월 15일 개최할 예정으로 협의한 뒤 8월에는 상해기성회 위원 30명, 북경교민회 선출위원 15명, 북경군사통일회 선출위원 5명, 친진교민회 선출위원 5명으로 국민대표회 주비위원회(이하 주비회)를 조직했다.³⁾

그러나 국민대표회의의 개최는 1921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극동아시아의 문제를 다룰 태평양회의가 열린다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경비 조달의 어

불허할 일, ⑤ 양 방면에 대한 제의 또는 권고가 무효로 될 시는 間西는 간서 자체를 보장 자퇴할 일.

3) 《독립신문》, 1921년 10월 5일.

려움 때문에 계속 연기되었다. 특히 태평양회의에 대한 기대는 국민대표회의 문제를 잠깐 휴식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1922년 2월 기대를 걸었던 태평양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태평양회의에 대응하여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이 상해로 돌아오면서 1922년 4월 이후 국민대표회의 소집 추진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1922년 5월 중순 북경군사통일회·천진기성회·동녕현기성회·상해기성회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주비회를 보완하고 9월 1일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자금문제와 대표들의 도착이 늦어져 연기를 거듭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12월 27일 62명의 주비회원이 국민대표회의 예비회의를 열고 1923년 1월 3일부터 정식회의를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역사적인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외 각지에서 상해의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한 주요 대표들은 이념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구별되었고, 각 진영 모두 자신들의 이념과 독립운동 노선에 따라 국민대표회의에 임하는 입장이 달랐다.

민족주의 진영은 대체로 임정에 대한 입장과 독립운동 노선에 따라 임정의 개조를 주장하는 개조파와 임정을 부인하고 새로운 기관의 건설을 주장하는 창조 양파로 분화되었다. 개조파에는 상해를 중심으로 임정 안팎에서 활동했던 안창호를 중심한 서북파와 기호파 일부, 서로군정서·한족회가 중심인 서간도의 독립군단체가 대표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도 운동노선에서는 안창호 등의 준비론과 서간도의 독립전쟁론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임정의 외교독립론·준비론에 반발하여 독립전쟁론을 주장하며 북경을 중심으로 반임정 활동을 해 온 박용만·신숙 등 북경군사통일회는 민족주의 진영의 창조파를 대표했다.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사회주의진영에는 초기 한국 사회주의운동의 특징을 반영하듯 주로 해외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은 1918년 노령에서 이동휘가 한인사회당을 조직한 이후 이동휘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김만겸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으로 분열되어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이 가운데 이동휘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정의 통합에 적극적이었듯이 일찍부터 민족주의 진영과 연합을 꾀해 온 반면에, 김만겸 등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반임정의 입장을 취했다.⁴⁾ 1922년 코민테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통합이 실패한 뒤 상해파는 민족혁명에 우선 목표를 두고 개조파의 입장을 견지한 반면에, 이르쿠츠크파는 반임정의 입장에서 창조파에 참여했다.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개조·창조 양파의 참가세력과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개조·창조파의 참가세력과 운동노선

	주요 참가 세력		주요 인물	主 義	주 요 입 장		
					임정에 대한 태도	지 향	운동 노선
개조파	상해의 개조파	임정내의 개조파	안창호 등 서북파	민족주의	임정 인정	정부개조 및 대독립당건설	실력양성론
		상해파고려공산당	윤자영·김철수 등	공산주의	임정 인정	정부개조 및 민족혁명당건설	무장독립론
	서간도의 개조파 (서로군정서·한족회)		김동삼·이진산 등	민족주의	임정 인정	정부개조	무장독립론
창조파	북경의 창조파 (북경군사통일회)		박용만·신숙·신채호	진보적 민족주의	임정불신임	신조직 건설 (위원제정부)	무장투쟁론
	상해·노령의 창조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김만겸 등	공산주의	임정불신임	민족혁명당 건설	무장투쟁론
		대한국민의회파	문창범 등	공산주의	임정불신임	신조직 건설 (위원제정부)	무장투쟁론

* 趙澈行, <국민대표회(1921~1923)연구> (《史叢》 44, 고려대, 1995), 163~167쪽.

<표>에서 보듯이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각기 이념이나 독립운동 노선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조·창조 양파로 양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정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4)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분열, 대립에는 비귀화선인·귀화선인이라는 조직기반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조선혁명의 성격과 운동론에 대한 뿌리깊은 이견이 있었다. 즉 상해파는 민족해방을 민족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으로 성장·전환한다는 연속혁명론을, 이르쿠츠크파는 사회주의혁명론을 주장했다. 때문에 상해 임정에 대한 입장도 크게 달랐던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林京錫, 《高麗共產黨研究》(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 참조.

(2) 정부옹호파의 국민대표회 반대운동

1921년 2월 초 국민대표회 소집론이 제기된 이후 정식 회의가 열리기까지 상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대표회 소집을 지지하는 상해의 개조파 및 북경의 창조파와, 이를 반대·지지시키려는 정부옹호파가 크게 대립했다. 일반적으로 국민대표회를 반대하고 임정 고수를 주장한 이들을 임정유지파로 일컬어 왔고 이들은 주로 이승만을 중심한 기호파 인사들이었다. 그런데 개조파 역시 기본적으로 임정 유지를 주장한 점에서 이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는 임정유지파를 당시의 용어인 ‘정부옹호파’로 대신하였다. 예컨대 국민대표회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참 일던 무렵 《독립신문》에 투고된 한 글에서는 “今日에 至하여 므슨 理由로 所謂 政府擁護論이란 別問題까지 니러나 누구누구난 政府擁護派라는 名詞가 隱然” 중 생겼다고 하면서, 이들은 “政府 아래 俯首服從하는 者”라고 했다.⁵⁾ 국민대표회 소집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정부옹호파는 이를 ‘政府敗潰運動’으로 파악하고 크게 반발했다.

1921년 2월 초 이후 국민대표회 소집론이 점차 확산되어가자 趙璣九·윤기섭 등 45명의 정부옹호파는 3월 5일 임시정부를 절대로 지지할 것, 현대통령 이하 각 국무원을 신임할 것, 언론·행동 등 일체의 현시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선언서를 반포하고, 3월 12일 상해 거류민단 사무소에서 현 정부를 후원할 단체를 조직할 목적으로 윤기섭·조완구·김구 등 20명을 조직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국민대표회 소집세력에 대응하는 정부옹호파의 외곽 단체로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절대로 옹호할 것”, “광복의 정신과 協進主義를 鼓勵할 것”, “국세의 납입을 勵行할 것”, “군사의 복습을 督進할 것” 등 4개항의 강령을 채택했다.⁶⁾

이 무렵 상해에 머물고 있던 임시대통령 이승만은 1921년 5월 17·18일 임시의정원과 국무원에 외교상 긴급한 일과 재정의 절박함을 이유로 미국에 건너간다는 사실을 통고하고 법무총장 申圭植을 국무총리 대리로 임명한 뒤 상해를 떠났다. 이때 그는 임시대통령 명의의 〈諭告〉를 발포하여 국민대표회

5) 《독립신문》, 1921년 12월 6일.

6)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Ⅱ(東京: 原書房, 1967), 142~143쪽.

소집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신규식 내각이 할 일을 밝혔다.

〈유고〉에서 이승만은 국민대표회 소집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어 상해 정국의 최대 현안이 된 자신의 거취 문제, 즉 대통령직 퇴진 문제에 대해 이것은 완전한 민의기관에서 공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大局을 흔들려는 도의에 어긋난 소수인의 행위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신규식 내각에 대해서는 비상한 결속과 결심으로 임정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고 정부의 중대 안전과 국무원 진퇴에 관한 문제는 자신의 동의를 받아 결정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다소의 불평자나 음모자들의 선동을 잘못 듣고 대국을 顛覆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⁷⁾ 이처럼 이승만은 〈유고〉를 통해 국민대표회를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임정이 존폐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임정 유지를 내각에 당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의 행위는 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국을 수습하기보다는 당시 위임통치 청원문제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그로 인한 임정 분열의 수습을 방기하고 도피한 성격이 짙었다.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국민대표회 소집을 저지시키기 위해 상해의 정부 옹호파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국민대표회 소집론자들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제기한 위임통치 청원문제를 해명하는 데 노력했다. 자신의 상해 비선조직의 일원인 장봉은 1921년 6월 18일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 상해나 북경 등지의 청년은 물론 중국인이나 서양인 사이에 “1910년에 한국 주권자가 통치를 일본에 넘겨준 것과 이승만이 한국통치권을 미국에 요구하기를 청원한 것은 다 같은 의미요, 같은 해석에 속한다”거나 이승만은 “이완용과 같다”는 등 위임통치 청원문제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鄭漢景으로 하여금 위임통치의 定意와 청원한 이유, 청원한 이후의 결과 및 영향, 사건에 관계된 인물 등을 세상에 공포하게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⁸⁾

장봉의 편지를 받은 이승만은 1921년 7월 16일 국무총리 대리 신규식과 장봉에게 위임통치 청원문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정한경의 편지를 보내어

7) 中央日報社・延世大學校韓國學研究所, 《梨花莊所藏雲南李承晩文書》東文編 六(國學資料院, 1998), 46~63쪽(이하 《李承晩文書》).

8) 《李承晩文書》18, 118~120쪽.

공포할 것을 당부했다. 이때 이승만은 이와 관련한 소문이 국내에 퍼질 것을 더욱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⁹⁾

위임통치 청원문제의 한 주역인 정한경은 1921년 3월 26일과 6월 12일 두 차례 안창호와 이광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은 3·1운동 이전의 일이고 당시 안창호가 회장으로 있던 대한국민회 중앙총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때도 없이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은근히 안창호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승만은 이와 함께 미주·간도 및 국내의 지지 세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대표회를 고립·무산시키려는 계획도 진행했다. 이것은 그가 신규식 및 국내의 李商在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1921년 7월 16일 신규식에게 편지를 보내어 미주에서는 정부옹호책으로 동지회를 조직하여 정부를 파괴하려는 자와 아주 분립하여 奮勵制禦하기를 결심하였으니, 원동에서도 이러한 단체들과 연락하고 특히 북로군정서의 隱溪(白純) 선생과 상의하여 군정서의 이름으로 정부를 옹호한다는 주지를 성명케 하도록 지시했다.¹⁰⁾

그는 1921년 7월 29일 이상재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신규식·손정도·김인전·윤기섭·이회경·조완구·신익희·이동녕·이시영 등은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자인 반면에 박용만·이동휘·남형우·신숙·김규식·안창호·여운형 등 국민대표회 소집론자는 정부파괴를 선전하는 자이며 재정만 있으면 이런 소수인들의 파괴운동이 무효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면서, 지금 국무원은 결속이 잘되어 전과 같이 분열하던 폐가 없으니 정부의 현상유지 경비로 1년에 3만원을 담당해 줄 것을 부탁했다.¹¹⁾

9) 《李承晩文書》 16, 59~60·229~236쪽.

10) 《李承晩文書》 16, 56~57쪽. 1922년 4월 22일 同志會에서 하와이 各島各地方代表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우리가 우리 임시대통령의 권고하심을 두고 동지회를 조직함이 무삼 연고인뇨. 우리가 하나님 략해서 맹서하고 이 회를 조직함은 우리의 거대한 독립스룹을 위하야 우리 동지가 립시정부를 받들시 우리 二千萬의 두령되시는 대통령을 압해서우고 스심을 갖치 하면서 조국을 괴어히 광복코져 함이라”(《李承晩文書》 12, 231~232쪽) 한 데서 동지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1) 《李承晩文書》 16, 180~185쪽.

이승만은 1921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태평양회의에서 한국문제가 잘 결정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하며 이상재에게 경비 20만원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고 임정에게도 모든 역량을 태평양회의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즉 그는 태평양회의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속히 할 일로써 국내와 원동 각지에서 재정을 확보하여 구미위원부로 보내고, 국내와 원동 각지에 시위운동을 신속히 착수하여 민심을 정부로 통합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국민대표회 소집론을 정부를 파괴하려는 소수 불평분자들의 소행으로 왜곡하고 자신이 그 동안 비선조직을 통해 상해와 국내외 각지에 구축해 놓은 지지세력을 동원하여 국민대표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나아가 그는 태평양회의를 구실로 정치적 위기를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한편 태평양회의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임시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승만이 미국에 건너간 뒤 임정의 절대옹호의 책임을 맡게 된 신규식 내각은, 1921년 11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태평양회의는 우리 국가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장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며 태평양회의의 준비에 진력했다. 이때부터 다시 한번 국내외가 미국에 기대를 걸고 온 역량을 태평양회의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대표회의 개최문제는 일시 잠복되었다. 그러나 1922년 2월 태평양회의는 이승만이나 정부옹호파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태평양회의는 결국 그 동안 국민대표회 소집을 반대하며 온 역량을 외교활동에 집중했던 신규식 내각에게 외교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신규식 국무총리 대리가 사직한 데 이어 군무총장 노백린 한 사람을 제외한 이동녕·이시영·손정도 등 모든 각원이 사직함으로써 1922년 3월 이후 임정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3) 제10회 임시의정원

임정이 기대했던 태평양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뒤 상해정국의 관심은 다시 국민대표회 소집으로 이어졌다. 이후 국민대표회 소집을 둘러싼 정부옹호파와 국민대표회 지지파 사이의 대립은 1922년 2월 8일 개최된 제

10회 임시의정원으로 옮겨 갔다.¹²⁾ 임시의정원에서는 개회 이래 의정원의 결의를 통해 국민대표회 소집을 공식화하려는 지지파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정부옹호파 의원 사이의 치열한 정쟁이 6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먼저 회의 제11일제인 1922년 3월 11일 신익희·윤기섭·양기하·손정도·연병호 등 5명은 우리의 조국을 광복하려는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의 강령·방략·정책을 원만히 협의하여 적법 또는 합리적으로 신속히 실행키 위하여, 국내외 각지의 단체 대표(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각지의 신망과 지식이 특정한 인사를 망라한 대회의를 가급적 속히 소집할 것을 임시정부에 건의하자는 안을 제출했다.¹³⁾ 국내외 각지 단체의 대표 및 신망있는 인사를 망라한 대회의의 소집을 정부에 촉구한 이 건의안은 이미 소집된 국민대표회를 정부가 승인하라는 것이었다. 이 안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조완구 등 정부옹호파의 반대에 부딪혀 찬성 6, 반대 9표로 부결되었다.

이어 회의 25일제인 1922년 4월 3일 도인권 등 의원 5명은 千世憲 등 상해 교민 100여 명이 연서한 <인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대표회에 찬의를 표하여 이 회가 소집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¹⁴⁾ 이 청원안이 제출되었을 때 임시의정원에서는 국민대표회 지지파 의원과 정부옹호파 의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그 쟁점은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본안을 임시의정원에서 수리함이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장봉·조완구 등은 이 청원안이 인민의 자발적 의사인지 의심하면서 법리상으로 민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이 있는데도 국민대표회가 있음은 불가하고, 청원자가 국민대표회 소집 당사자인 주비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청원안의 승인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도인권·이윤희·신익희 등은 법리론으로 따져도 국민대표회가 헌법상 기관이 아닌 점에서 위헌

12) 1922년 3월 10일 내무차장 조완구가 보고한 제10회 임시의정원의 의원 선거 상황을 보면, 총의원 57명 가운데 지금 補選이 안된 의원은 俄領 6명, 함경도 6명, 경상도 6명, 전라도 5명, 서북간도 5명(이상 4개 지방은 의원이 自退하고 補選치 않음), 강원도 2명, 美洲 2명(선출했으나 未到)으로서 합 32명이라고 하여 현재 선출 의원은 25명이라 하였다(《독립신문》, 1922년 4월 15일).

13) 《독립신문》, 1922년 4월 15일.

14) 《독립신문》, 1922년 5월 6일.

도 아니고 임시의정원의 존엄을 손상하지 않으며, 사실론으로도 인민이 의회에 청원함은 민주국에서 가장 적법한 행위이고 청원인과 주비회측은 다른 사람이 아니니 관계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승인을 주장했다.¹⁵⁾

국민대표회 지지파 의원과 정부옹호파 의원 사이에 치열한 찬반 토의를 거친 뒤 1922년 4월 13일 토론의 막바지 단계에서 정부옹호파 의원인 조완구·윤기섭·閔忠植·李駟珪 등이 퇴장함으로써 찬반의 표결을 하지 못한 채 회의는 정회되었다. 이튿날 출석 의원 15명이 표결하여 찬성 10, 반대 3 표로 인민청원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옹호파인 장봉 등 6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영구적 제도로 개정하기로 준비하기 위하여 4개월 이내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하고 아울러 광복운동자 회의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자”는 안을 제출했다.¹⁶⁾ 이 안은 정부가 주최가 되어 광복운동자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와 의정원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임정 중심의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국민대표회 소집 이유와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여기에는 국민대표회를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1922년 5월 8일 국민대표회 지지파 의원들의 반대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연구회를 설치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구하여 연구·주비키 위해 금후 5개월 이내에 임시의정원 회의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결의한다는 수정안으로 변질되어 통과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표회 지지파 의원들은 국민대표회 소집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이승만의 퇴진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지파 의원인 조상섭·오영선 등은 지난 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 실패에 책임지고 군무총장 노백린을 제외한 전 각원이 사직하여 무정부 상태인 정부의 복원을 이승만에게 촉구했다. 임시의정원에서는 여러 차례 이승만에게 각원 조각을 촉구했으나 그의 대답은 “지금 의론 중이니 기다리라”거나 “돈 거두는 일에 방해되니 속히 정

15) 《독립신문》, 1920년 5월 27일, 6월 3·14·24일.

16) 《독립신문》, 1922년 7월 1일.

돈하라”는 무책임한 반응뿐이었다.

국민대표회 지지파 의원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각원 조각을 이승만에게 촉구한 것은, 무정부 상태에 있는 정부를 하루빨리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승만의 퇴진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것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 각원 조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영선 등 5명이 <대통령 및 현임각원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1922년 6월 5일 이승만에게 불신임안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전보를 보낸 데서 분명해진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의 의향을 묻는 전보를 받은 이승만은, 1922년 6월 10일 정식 후임자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것을 專任할 곳이 없어 辭免을 못 하겠다고 임시의정원에 답해 왔다. 이에 임시의정원은 비공식 회의를 열고 후임자 선거의 책임은 임시의정원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사직하라는 답전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6월 12일 <대통령 및 현임 각원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통령불신임안의 제출 이유는 ‘내정 불통일’, ‘외교의 실패’, ‘조각 불능’ 등 세 가지였고, 국무원불신임 이유는 대통령 불신임 이유에 대한 책임 외에 무정부 상태에 빠진 시국을 회복하려는 성의가 없다는 것이었다.¹⁷⁾

국민대표회 소집론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이승만의 퇴진문제였듯이, 이승만은 1919년 4월 임정 수립 이래 외형적으로는 독립운동계의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소였다. 때문에 임시대통령 불신임안은 당시 정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옹호파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이 불신임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국민대표회 지지파의 입장을 인정, 결국 국민대표회를 승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는 기호파의 중심축을 잃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1922년 6월 17일 표결할 때 이필규·李秉周·민충식 등이 퇴장한 가운데 이 안은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되었다. 수세에 몰린 정부옹호파는 6월 26일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金甫淵 등 상해 교민 113명의 연서로 임시의정원에서 이미 통과된 국민대표회의 제안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인민청원안>을

17)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

제출, 국민대표회를 저지시키려 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제10회 임시의정원에서는 〈국민대표회의 찬성안〉과 〈대통령 및 각원 불신임안〉이 통과되었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직하지 않았고 또한 그를 옹대하는 일부 인사 가운데서는 의정원의 처사를 불법이라 하여 승복하지 않았다. 이에 신익희·오영선·이윤희·손정도·안정근·양기하·조상섭 등 국민대표회 지지파 의원들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대로 실행하는 날에는 두 개의 정부가 출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포기하고 정부옹호파들이 원하는대로 해 보라고 하는 자포자기적 심정에서 1922년 7월 4일 의원직을 사직했다.¹⁸⁾ 이로써 임시의정원에서마저 국민대표회 지지파 의원들이 나옴으로써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임시의정원에서 국민대표회 지지파와 정부옹호파의 대립으로 국민대표회의 소집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정부 외곽에서 국민대표회 개최를 위한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2년 6월 8일 慕爾堂에서는 임시의정원·국민대표회주비회·정부 등 세 방면의 대표들이 나서 시국에 관한 각자의 정견 발표를 하고, 이어 12일 ‘留滬靑年大會’, 24일 ‘비판연설회’ 등을 잇달아 열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또한 孫斗煥 등도 7월 13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의 친구 각원 및 의원, 국민대표회주비원 등 40여 명을 불러 시사책진회를 조직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가졌으나 조소앙·이필규·김용철 등 정부옹호파들이 시사책진회가 자신들의 의사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탈퇴함으로써 이것마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국민대표회의가 정식 개최되기 전 국민대표회 지지파들은 임시대통령 불신임안으로 독립운동계 통일의 최대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임시의정원으로 하여금 국민대표회를 승인케 함으로써 원만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대표회가 불법이라는 법리상 명분을 내세워 국민대표회의의 개최를 저지하려는 정부옹호파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대표회 지지파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후 국민대표회의는 두 파 사이의 불신과 대립 속에서 열리게 되었다.

18) 《독립신문》, 1922년 7월 8일.

2) 국민대표회의의 전개 과정

(1) '비공식회의'와 제11회 임시의정원

정부옹호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표회의 정식회의는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1923년 1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참가한 지역 및 단체는 135개이며, 대표는 158명이었다. 그러나 회기 동안 자격심사를 받아 대표로 확정된 인원은 125명이었다.¹⁹⁾

1923년 1월 3일부터 시작된 국민대표회의는 그해 6월 7일 폐회되었는데 회의 형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시기는 정식회의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임시회의기(1. 3~1. 30), 제2시기는 시국문제와 군사·재정·노동 등 독립운동의 주요 방침이 논의된 정식회의기(1. 31~5. 15), 제3시기는 시국문제로 개조파가 탈퇴한 뒤 개조파·창조파·정부측의 대표들이 최종적으로 가졌던 三方會議가 열렸던 비밀회의기(5. 16~6. 7)이다.

임시회의는 1923년 1월 3일 62명의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1월 29일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표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회의규정이 통과되었으며 국민대표회의 정식간부로 의장 김동삼, 부의장 윤해·안창호, 비서장 배전택, 비서 金綴洙·吳昌煥·朴完三 등이 선출되었다.

1월 31일부터 시작된 정식회의에서는 준비회와 각 지방·단체의 경과 보고가 있는 후 1923년 3월 5일부터 시국문제가 토론되었다. 3월 9일 윤자영 등 개조파는 다음과 같은 3개항의 개조안을 제출했다.

- ① 본 국민대표회의는 우리들의 운동으로써 세계의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이 되도록 결정한다.
- ② 본 국민대표회의는 우리들의 운동으로써 血戰에 중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결정한다.
- ③ 본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방법·헌법·제도·정책 및 기타 일체를 실제 운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결의한다.

(국회도서관, 《島山安昌浩資料集》 1, 1997, 65~66쪽).

19) 金喜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지식산업사, 1995), 170쪽.

이어진 회의에서 1항은 ‘본 국민대표회의는 우리의 독립 운동으로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을 구축할 것을 결의한다’로, 2항은 ‘본 국민대표회의는 우리의 독립운동으로써 혈전에 주력하고 조직적 계획하에 급진적 보조로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로 큰 반대없이 수정, 가결되었으나 문제는 3항이었다.

1923년 3월 15일 회의에서 창조파인 원세훈이 3항은 시국문제가 아니고 조직문제이므로 차후 일정 중 조직문제가 상정되면 그때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반대토론을 벌이면서 창조론과 개조론이 본회의에서 대립하게 되었다. 반대토론이 계속되던 3월 21일 의장 김동삼은 창조파가 구체적으로 반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대표회의는 시국문제로 결렬의 첫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개조파는 결렬의 국면을 타개하려고 창조파와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시국문제의 쟁점이 된 3항은 의정순서 가운데 노동문제가 종료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고, 대신 그 사이에 개조파는 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설득하여 국민대표회의에 참가시키기로 합의했다.²⁰⁾ 만약 이 합의대로 정부와 임시의정원이 국민대표회의를 인정, 참여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최고기관이 새롭게 조직된다면 그것은 개조파나 창조파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4월 11일부터 다시 개최되어 이후 재정·교육·생계문제 등을 비롯한 노동문제가 통과되는 5월 10일까지 큰 마찰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안창호 등 개조파는 국민대표회의의 결렬을 막으려고 우선 정치적으로 큰 마찰이 없는 각 분과의 의안을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파 소속의 의정원 의원으로 임시의정원을 통해서 비공식회의에서 창조파와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국민대표회 지지파들이 제10회 임시의정원에서 벌인 노력의 연장이기도 했다. 때문에 이후 상해정국은 한편으로는 국민대표회의가 각 분과를 중심으로 의안을 다루는

20) 박윤재, <1920年代初 民族統一戰線運動과 國民代表會議> (《學林》 17, 1997), 171쪽.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임시의정원에서 개조파와 정부옹호파가 격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조파들이 정부옹호파를 국민대표회에 참여시키려는 시도는 국민대표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다. 일제측의 정보에 따르면, “김동삼·왕삼덕·이진산·김갑·김철 등은 吳永善을 중개자로 삼아 정부측의 장봉·조소앙·이시영·노백린 등과 접촉하고 종전의 정부를 계승할테니 임시정부·의정원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모든 것을 국민대표회의에 일임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²¹⁾ 그러나 개조파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대표회를 거절하라는 이승만의 강력한 지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뒤 이승만은 상해와 국내를 대상으로 〈警告同胞文〉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수 불평분자의 정부파괴운동이며 자신의 거취문제를 국민대회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은 한성에서 13도 대표가 공식으로 선거하여 세계에 공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외 인민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합의될만한 이들과 협동하여 인원을 축소, 비용을 절약하고 선동자의 선전에 가벼이 흔들리지 말고 냉정한 상태를 견지하여 임정을 절대 옹호할 것을 지시했다.²²⁾ 때문에 개조파와 정부옹호파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조파의 정부옹호파 설득 작업은 1923년 2월 15일 개원된 제11회 임시의정원에서 본격화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열렸지만 결원된 의원이 많아 사실상 개원 휴점 상태였다. 이후 보선을 통해 의원 30여 명을 확보하면서 임시의정원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개조파는 먼저 조덕진 등 9명의 의원이 연서하여 제출한 〈대국채신안〉을 제출, 1923년 4월 2일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안은 과거의 모든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독립운동자의 정당한 여론을 채택하여 필요 또는 적당한 방략을 연구, 우리 독립운동에 관한 국면을 日新케

21) 국회도서관, 《島山安昌浩資料集》1, 58쪽.

22) 《李承晩文書》8, 507~531쪽.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에 따라 의정원에서는 조덕진 외 7명의 의원으로 대국쇄신에 대한 실행방법을 연구하여 구체적 안을 작성, 보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²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국쇄신을 위해 일반 독립운동자의 정당한 여론을 채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국민대표회의에서 모아진 여론을 뜻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7인의 특별위원은 <대국쇄신실행안> 3개 항을 마련하여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헌법 제57조²⁴⁾를 개정하여 임시헌법의 개정 또는 조직제도의 변경 및 중대사업의 처리는 국민대표회의에서 행하되, 단 국민대표회의는 각지방 독립운동단체에서 직접 선출한 대표의 회의이며 임시의정원의 결의로써 이를 인정한 자로 개정하는 일이며, 둘째 임시의정원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는 일이며, 셋째 현재 개최되고 있는 국민대표회의를 헌법 제57조에 적합한 국민대표회의로 인정하여 헌법개정·정부조직·제도 기타 일체 변경할 권리를 전임한다는 것이었다.²⁵⁾

결국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국쇄신실행안>은 현재 개최중인 국민대표회의를 개정될 헌법 제57조에 적시한 국민대표회의로 인정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통해 국민대표회의에 임정의 운명을 맡기자는 것이었다. 안창호 등 개조파가 비공식회의에서 창조파와 약속한 정부 설득방안이란 곧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아가 임시헌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개조를 국민대표회의에 전임시킨다는 것이었다.

개조파의 이러한 계획은 당연히 정부옹호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창조파와 약속한 기일을 넘기게 되었다. 개조파는 다시 창조파를 설득하여 국민대표회의를 5월 4일부터 9일까지 휴회하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개조파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정을 보아야 했다. 이에 개조파는 자파 의원 文時煥 등을 통해, 임시의정원의 권한으로 현재 개회중인 국민대표회의로 하여금 <대

23) 《독립신문》, 1923년 5월 2일.

24) 임시헌법 제57조의 내용은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2/3 이상이나 혹은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4/5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3/4 이상의 가결로 개정을 득함” 등이다(《독립신문》, 1919년 9월 16일).

25)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312쪽.

한민국 임시헌법>을 개정케 하고 기타 중대사건을 처리케 하자는 긴급 제의를 했고, 이 제의는 1923년 5월 4일 통과되었다.

헌법개정의 권한을 법개정도 없이 임시의정원의 의결만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하려 한 개조파의 긴급 전술은 법리상 분명 위헌이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정부옹호파에게 반격할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정부옹호파의 강경한 일원인 조완구는 국민대표회와 임시의정원이 병립하는 것은 의회사상 치욕이라고 하며 개조파를 의회의 신성을 모독한 협잡배라고 비난했다.²⁶⁾ 또한 김용철 이하 7명의 의원도 5월 4일 긴급제의를 통과시킨 것은 임시의정원의 직권을 상실케 하고 의정원의 체면을 욕되게 하여 헌장을 문란케 한 불법행위라고 극렬히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물어 의장 윤기섭과 부의장 도인권의 정계안을 제출했다.²⁷⁾

이와 같이 긴급제안의 통과에 대한 정부옹호파의 비난과 반대가 격렬해지면서 의장 윤기섭은 통과된 긴급제의를 무효를 선포했다. 정부옹호파의 반대로 긴급제이가 사실상 무효로 돌아가자 이에 찬성했던 경상·전라·황해·평안·서간도 등지의 의원들이 정국 수습과 각 방면을 통일할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사면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의정원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11회 임시의정원은 국민대표회에 임하는 개조파의 의도를 좌절시킨 채 1923년 5월 19일 폐원되고 말았다.

임시의정원의 이 같은 결과는 곧 비공식회의에서 창조파에게 약속했던 개조파의 의도가 무산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 결과 일시 유보되었던 시국문제를 둘러싸고 개조파와 창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2) '삼방회의'와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1923년 5월 10일 국민대표회의에서 군사·재정·외교·생계·노동문제 등 6분과안이 차례로 상정, 통과됨으로써 각 분과의 의안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개조파와 창조파가 비공식회의에서 합의했던 임정의 국민대표회 참

26) 위와 같음.

27) 《朝鮮民族運動年鑑》, 1923년 5월 1일.

여계획이 제11회 임시의정원에서 좌절되면서 시국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시국문제와 관련되어 제출되었던 의안은 申二鎭 등의 임시정부개조안, 金宇希 등의 신기관건설안, 朴健秉 등의 국시확립안, 여운형 등의 신독립당 조직안 등 네 가지였다.

1923년 5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시국문제는 이미 결정된 두 안으로 종결하고 기타 제안은 일체 기각하자는 鄭寅敎의 긴급 제안이 있는 후 김우희·여운형 등의 제안은 취소되었고, 정인교의 긴급 제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여 시국문제에 대한 토의는 일단 연기되었다.

시국문제를 두고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1923년 5월 15일 의장 김동삼, 서기 배천택, 헌법기초의원 이진산 그리고 김형식 등은 자신들이 속해있던 서로군정서 및 한족회로부터 국민대표회의가 더 이상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표 소환의 통지서를 받고 사임했다. 국민대표회는 4명의 대표자격 상실을 인정하고 부의장 윤해가 의장에, 부의장 후보자 신숙이 부의장에, 비서 오창환이 비서장에 각각 보궐됨으로써 본회의를 진행하는 주요 직책을 창조파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튿날 개조파도 통일의 유일 방침인 개조안이 기각되고 국호·연호를 새로 정하면 이는 일민족에 두 개 국가를 형성하여 可憐의 화근을 낳는다는 이유로 개조파 대표 57명이 국민대표회의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국민대표회의는 최대의 결렬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다만 개조파를 이끌던 안창호가 창조파에게 비공식회의를 통한 원만한 타협을 제안함으로써 국민대표회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갖게 했다. 이때부터 창조·개조 및 정부 사이에 비공식회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윤해 등 창조파 대표들은 개조파가 탈퇴한 근본 문제인 정부문제를 해결하려고 1923년 5월 19일 정부측과의 협상을 모색했다. 창조파의 입장에서 결렬의 책임을 면하고 나아가서는 개조파를 설득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 표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창조파는 정부측과의 협상을 통해 개조파의 탈퇴 명분을 없애고 동시에 개조파의 회의 참가를 설득하는 데 노력했다.

창조과는 1923년 5월 20·21·22일 3일간 회의를 휴회시키고 5월 22일 이후 윤해와 국무총리 노백린이 여러 차례 만나 임정과 국민대표회의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24일 협상에서 양측은 노백린이 제출한 임정과 국민대표회의 통합 5개안을 합의하고, 이것을 각각 국무회의와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보고 이튿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합의된 <통합원칙 5개안>이란 임정과 국민대표회의는 서로 서한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상호 권위를 인정하며, 임정에서 국민대표회의에 3인의 위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임정은 국민대표회의에서 정한 헌법을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때 개조과는 정부측과 건설과(창조과)의 타협이 성립하면 회의 참석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²⁸⁾

그런데 노백린이 제안한 이 안은 형식적으로는 국민대표회와 임정이 상호 승인을 통해서 양쪽의 명분을 살렸지만 여전히 임정의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정부옹호파의 입장과는 크게 달랐다. 노백린이 정부안으로 제안했던 통합원칙은 5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결되어, 창조과와 임정측의 비공식회의에서 논의되던 국민대표회와 임정의 통합 노력도 일단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창조과와 정부측의 비공식회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朴春根 등 상해파 고려공산당측 대표 7명이 창조과·개조과 및 정부측 등 ‘삼방’의 비공식회의를 주선했다. 그 결과 1923년 5월 31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임정·개조과·창조과에서 각 3인씩의 대표가 참여한 ‘비공식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정부의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정부옹호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비공식간담회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자 창조과는 6월 3일 자신들만의 국민대표회의를 열고 국호를 ‘韓’, 연호를 ‘건국기원’으로 정했다.

창조과에 의한 신기관 건설이 확실해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노백린은 1923년 6월 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창조과와 개조과의 주요 간부를 정부사무실로 초청하여 다시 한번 비공식회의인 ‘사후삼방회의’를 열어 마지막

28)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318쪽.

타협을 시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창조파의 윤해·신숙, 정부측의 노백린·조소앙·홍진, 개조파의 안창호·손정도·정신·왕삼덕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6월 4일 정부사무실에서 다시 열린 사후삼방회의에서 노백린은 〈국민대표회의의 선언서〉 및 국호·연호 등 임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일체 취소하고, 정부 및 의정원에서는 국민대표회의에 헌법개정의 권한을 부여하되 국민대표회의에서 이를 개정하면 다시 의정원에 회부하여 통과시킨 후 이를 공포하자는 2개항의 타협안을 제출했다.²⁹⁾

노백린의 안은 개조·창조 양파가 모두 반대하여 기각되었다. 이어 창조파의 윤해가 마지막 타협안으로, 임시의정원과 국민대표회의가 비공식 연합회를 열어 헌법회의를 조직하여 헌법 및 일체의 결의권을 위임하고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을 자진 해산하고 국민대표회의는 폐회하자는 〈헌법회의안〉을 제출했다.³⁰⁾ 그러나 이 안마저 6월 5일 열린 국무원 긴급회의에서 거부됨으로써 사후삼방회의마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정부옹호파가 임정에 대한 어떠한 변동도 용납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임정 개조나 신기관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조파나 창조파의 타협안은 애초부터 성사될 수 없었다.

새 차례의 삼방회의마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자 이청천 등을 비롯한 9명의 대표들도 통일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국민대표회의 참여를 반대하여 탈퇴했다. 이로써 국민대표회에 남은 창조파 대표 39명은 1923년 6월 7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새로 제정한 헌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위원 33명, 국무위원 4명, 고문 31명으로 구성된 위원제정부를 조직하고 국민대표회의를 폐막했다.

신정부를 구성한 창조파 일행 30여 명은 1923년 8월 상해를 떠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강화하려 했지만 곧바로 소련의 반대에 부딪혀 와해되고 말았다. 소련이 신정부 설치

29) 국회도서관, 《島山安昌浩資料集》 1, 97쪽.

30) 吳昌煥, 〈회의록〉(《宣布文, 憲法, 機關組織》, 러시아: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및 연구센터 소장, 1923), 19쪽.

국회도서관, 《島山安昌浩資料集》 1, 97쪽.

를 반대한 주요한 이유는 첫째 창조파만의 국민위원회는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민족통일전선으로서 민족단일당 형태를 취하기를 원했던 코민테른의 요구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둘째 소련과 일본의 협상 전개라는 정세 변화의 영향이었다. 1922년 말 일본군의 시베리아 철병과 소일협상의 새 국면 전개로 소련이 한인의 새 정부를 소련령에 허용할 경우 일본의 제도발에 부딪힐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인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할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국민위원회는 소련에서 추방되어 북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다.

한편 삼방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사실상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자 창조파에 대한 정부옹호파의 공세가 적극 진행되었다. 1923년 6월 6일 내무총장 김구는 창조파의 행위에 대해 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규정하고 6월 이후 일체 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내무령>을 발포했고,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국무령포고> 3호를 발포하여 창조파의 행위를 격렬히 성토했다.

《독립신문》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할 경우 우리 민족 장래에 가공의 대화근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듯이³¹⁾ 국민대표회의의 결렬은 그 동안 국내외 독립운동계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과 분열만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었다. 민족주의 진영 내부의 서북파·기호파의 대립과 북경파의 반임정 입장, 또한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의 분열은 민족적 대단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표회의를 결렬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3) 국민대표회의에서의 쟁점

(1) 국민대표회의의 적법·부적법 문제

1923년 3월 국민대표회의에서 시국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독립신문》에서는 국민대표회의의 소집동기와 회의요건의 대부분이 먼저 시국문제를 잘 해결함에 있다고 하고 만일 그 源頭를 명백히 아니하면 기타의 모든 良

31) 《독립신문》, 1923년 6월 13일.

計妙策을 아무리 정하여 놓는다 하더라도 다시 空算에 돌아갈 것이라며 시국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³²⁾ 국민대표회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시국문제란, 임정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조하자는 개조론과 과거의 내외 각지의 대소 단체기관은 다 없애고 신기관을 조직하자는 창조론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이에 따라 시국문제의 핵심은 그 동안 독립운동의 최고기관 역할을 해 온 임정의 존폐문제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부옹호파가 국민대표회를 극구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국민대표회의 소집 당시부터 개최여부를 두고 쟁점이 되었던 시국문제는 국민대표회의의 적법·부적법 문제였다. 1921년 2월 초 박은식 등이 국민대표회 소집을 주장했을 때 이를 반대한 정부옹호파의 입장은 13도를 대표하는 의정원이 있는데 또 국민대표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의정원이 곧 국민대표회이기 때문에 다른 대표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³³⁾ 즉 정부옹호파는 헌법상 최고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이 있는데도 같은 성격의 국민대표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법리상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정부옹호파의 입장에 대해 국민대표회 지지파인 개조·창조 양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국민대표회가 불법이라는 법리적 주장에 대해, 의원을 선출하는 각 구역의 선거회는 그 의원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있고 의정원 전체에 대하여는 선거회가 연합하여 합치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체의 선거회가 의정원과 대등되는 중첩 기관이라 할 수 없듯이 국민대표회를 일종의 연합선거회로 가상해도 이치에 부당함이 없고 법리상으로도 국민대표회와 의정원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³⁴⁾

국민대표회가 위헌이라는 정부옹호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의 독립운동도 대한이란 것을 위함이고 결코 임시헌법이나 제정코저 함이” 아니며 “일보를 更進하여 적극적으로 말하면 대한의 임시헌법은 대한의 독립을 위

32) 《독립신문》, 1923년 3월 7일.

33) 《독립신문》, 1922년 7월 8일.

34) 《독립신문》, 1921년 5월 25일.

하여 대한의 인민이 제정한 것이요 결코 대한의 임시헌법이나 제정키 위한 독립운동은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옹호파에 대해 “독립의 진의를 몰각한” “헌법에 중독된 자”라고 비판했다.³⁵⁾ 한 마디로 독립이 우리의 지상 목표이지 임시헌법 그 자체가 신성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대표회의가 성질상 임시의정원과 같은 기관이라는 정부옹호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대표회의의 성질은 국민 전체에 관한 제문제들 토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시적 회합이고”, “어느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존립한 단체가 아니라”, “자유 의사로 집합한 회의”이기 때문에 “대표회의를 단순한 국가입법권행사의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³⁶⁾ 즉 기관이란 성질에서 볼 때도 임시의정원은 헌법기관인데 반해 국민대표회는 일시적 회합이기 때문에 양자는 성질상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국민대표회의 적법·부적법 문제에 관한 논쟁은 형식논리에 가까운 것이었고, 그 이면에는 임시의정원의 대표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었다. 사실 임시의정원의 의원 선출 방식 및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임정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컨대 100여 명의 인민이 모여야만 할 道會에서 십수 명의 偏黨으로 모여 그 중에서도 5, 6표로 의원이 선출되고 혹 이도 못하여 해당 道의 인사가 상해에 자기 1명뿐이면 적재여부는 물론하고 무조건으로 의원이라 擅稱한다며 임시의정원 의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하여 의정원 의원과 국민대표회 대표를 비교하여 10명이 모여 5, 6표로 피선된 것이 원만한 대표인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단체에서 100명 이상 또는 한 지방 인민의 公選이나 혹은 국내의 몇몇 인물이 모여 지정한 대표 중 어느 것이 원만한 대표인가라고 하며 반문했던 것이다.³⁷⁾

국민대표회 지지파들은 임시의정원은 법리를 떠나 사실과 실제에 있어서 임시의정원 및 의원의 대표성을 비판·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시의정원

35) 《독립신문》, 1922년 7월 1일.

36) 《독립신문》, 1921년 8월 1일.

37) 《독립신문》, 1922년 10월 21일.

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시의정원의 존립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조파와 창조파의 입장이 크게 달랐다. 임시의정원에 대한 개조파의 비판은 국민대표회와 임시의정원이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임시의정원을 불신임한 창조파의 입장과는 크게 달랐다.

(2) ‘임정존폐’ 문제와 ‘임정법통론’

국민대표회의의 적법·부적법 문제가 회의 개최 이전의 문제였다면 회의 기간 내 최대의 쟁점은 임정존폐 문제였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임정에 대한 개조·창조 양파의 좁혀질 수 없는 인식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임정을 부인하고 신기관의 건설을 주장한 창조파의 인식 근처에는 임정은 3·1운동 이후 국내외 각지에 세워졌던 여러 임시정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 즉 창조파는 지금의 임정은 3·1 독립선언 이후 갑자기 남에서, 북에서, 안에서, 바깥에서 여러 최고기관이 성립되어 세상에 발표된 것만 하여도 그 수가 4, 5개나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일시의 사세로 대표적 행위를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³⁸⁾

창조파가 임정을 일개 독립운동 단체로 사실상 격하시킨 이유는 임정의 지역적 제한성 때문이었다. 즉 이들은 임정이 여러 독립운동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상해 한 켠에 있으면서 상해가 천하의 중심이요 상해에 모인 인물이 천하사를 좌하면 좌하고 右하면 우할 터이니 상해안만 타협되면 서북간도도 노령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잘못된 상해만능주의에 빠져있거나,³⁹⁾ 또는 다른 지역의 단체는 말하지 않고 오직 상해정부만 거론하는 상해관을 집중 비판했던 것이다.⁴⁰⁾ 이를 근거로 창조파는 정부옹호파의 국민대표회 반대 주장에 대해 “一粒만도 못한 상해 한 구석에서 전인구 4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효 중에서도 전부도 못되는 그들의 무리한 이론과 무가치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⁴¹⁾

38) 《독립신문》, 1922년 12월 23일.

39) 《독립신문》, 1922년 8월 12일.

40) 《독립신문》, 1923년 3월 14일.

41) 《독립신문》, 1922년 8월 12일.

결국 창조파의 주장에 따르면 임정은 처음부터 인적·지리적으로 제한된 상해의 일개 독립운동 단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임정으로는 분열된 독립운동계를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대표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와 지역 대표들이 모인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향후 독립운동을 이끌 최고기관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개조파 역시 임정이 성립할 당시 인적·지리적 제한성이 있었고 현존하는 임정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는 창조파와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예컨대 안창호는 국민대표회 소집을 주장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노령이나 중국의 어떤 단체가 각 방면을 소집하면 모두 이에 응하지 않듯이 임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임정의 한계를 지적했다.⁴²⁾ 그러나 개조파는 그 한계를 “혁명시의 불가피한 일”이라거나 아니면 “그때에는 시기의 절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여 문제인식의 근거가 달랐다. 때문에 이들의 임정에 대한 대응방식은 지금은 시기적 절박성으로 인해 생겨난 임정의 불충분한 점을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보완하자는 것이었다.

개조파가 임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대응방식에서 임정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근거에는 임정의 성립과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창조파와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개조파는 임정이 지난 5년간 내외가 공인하고 다수 국민이 추대했던 기성정부이고 수만 명의 유혈로 성립되어 다수 인민이 복종한 5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라는 임정의 역사성을 중시했던 것이다.⁴³⁾ 또한 미국 등 열강들이 임정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임정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개조파가 이러한 임정의 역사성을 중시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임정의 법통문제 즉 임정법통론이었다. 1919년 9월 상해 임정이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하면서 한성정부를 봉대하기로 하여 임정의 역사적 성립 근거를 한성정부에 두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성정부가 국내에서 성립되었고, 나아가 13도 대표가 모여 성립되었다는 점이

42) 도산기념사업회, 《安島山全書》中 (汎洋社出版部, 1990), 190쪽.

43) 《독립신문》, 1923년 3월 14일·4월 4일.

중요하게 작용했다. 개조파는 임정의 이러한 역사적 명분을 중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조파는 국민대표회를 탈퇴하면서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할 것을 우려했듯이 창조파의 뜻대로 신기관을 건설했을 때 이 범통론을 근거로 국민대표회를 반대하고 임정유지를 고집한 이승만과 정부옹호파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범통론에 대해 의연히 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른바 범통문제에 매몰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당시 《독립신문》에서는 “범통을 정하여야 할 절대 필요가 무엇인가. 지금 범통을 정하지 않으면 독립선언 후 4년간의 범통이 왜정부로 돌아갈까 염려함인가. 또 독립의 성공여부가 범통의 定石에 관계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10년, 100년의 세월을 소비하여서라도 범통문제에 전심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우리가 復國의 一日을 倏來한다면 독립선언 후뿐만 아니라 망국 후 10년간의 범통도 왜정부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 만일 복국의 하루도 없다면 망국 후 10년은 고사하고 건국 후 반만년의 역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며 범통론을 비판했다.⁴⁴⁾ 즉 한 뼘의 땅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통문제로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하루라도 속히 독립운동의 방침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임정존폐 문제가 쟁점이 된 이면에는 개조파·창조파·정부옹호파 사이에 현존하는 임정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에 커다란 차이가 내재되어 있었다. 즉 개조파는 현실론을 바탕으로 임정을 인정하고 부분적 개조를 주장한 반면에, 창조파는 임정의 지역적·인적 제한성과 범통론의 무용성을 바탕으로 임정을 부인하고 신기관의 건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양파의 이같은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결렬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대표회의는 시국문제에 대한 창조·개조 양파의 입장차이와 정부옹호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분열된 독립운동계의 통일을 목적으로 했던 국민대표회의의 좌절은 오히려 이 회의에 참여한 세력간에 그리고 임정의 현상유지를 고집한 정부옹호파 사이에 불신과 분열의 골만 깊게 했

44) 《독립신문》, 1922년 12월 23일.

다. 그럼에도 국민대표회의는 이후 독립운동의 발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먼저 비록 좌절은 했지만 국민대표회의가 남긴 의의는 첫째 독립운동계에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법리론이나 임정법통론과 같은 ‘명분’보다는 운동의 ‘실제’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낳은 점이다. 즉 국민대표회가 소집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독립운동의 실제에 맞지 않는 임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 있었듯이 독립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임정법통론이나 법리론과 같은 명분에 얽매이기보다는 독립운동의 실제적 근거와 경험을 기초로 삼을 것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둘째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명분과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현존하는’ 임정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이후 독립운동의 조직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즉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의 조직형태로서 인식되어 왔던 ‘정부형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 모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형태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모색은 국민대표회의 소집운동이 일던 무렵 그 대안으로 아일랜드의 심판당과 터키의 청년당, 이탈리아의 소년단 모양으로 우리도 대한의 혁명당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고, 여운형도 국민대표회 본회의에서 독립당 건설을 주장했다. 비록 이러한 주장들은 당시 임정 존폐문제를 둘러싼 시국문제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의 조직 형태로서 당적 형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 회의는 이후 해외 독립운동계 내에 이념적 분화를 촉진한 점이다. 즉 창조·개조 양파는 이념이나 운동노선 등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임정에 대한 입장이 분열과 결합의 원리로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것은 당시 독립운동계가 1920년을 앞뒤로 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을 수용한 이래 아직 내부적으로 이념적 분화를 모색하던 시대적 한계의 반영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은 회의기간 동안 독립운동노선, 최고기관 건설과 같은 조직노선 등의 더욱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국민대표회의를 실패하게 한 내적 원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회의는 이후 독립운동계를

이념과 독립운동노선 등에 따라 재편시키고 반일 민족통일전선의 결성 노력을 더욱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尹大遠〉

3. 임시정부와 유일당운동

‘唯一黨運動’이란 1920년대 중반에 중국본토와 만주지역에서 펼쳐진 민족운동세력의 통일운동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그 용어가 달리 쓰였는데, 유일당운동·민족유일당운동·좌우합작운동·민족협동전선운동·민족통일전선운동 등이 그것이었다. 이 운동은 국내에서 펼쳐진 新幹會와 더불어 민족운동세력을 하나로 묶어 항일전선에서 그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유일당운동이 지향하던 내용은 몇 가지 의미를 가졌다. 우선 정당조직체를 만든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것은 임시정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가졌다. 임시정부 수립 초기에 이미 항일투쟁의 구심체로 정부조직체와 정당조직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정부 수립 직후부터 반대세력이 형성되면서 정부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정당조직체를 들고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임시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 둘째, 유일당운동은 “정당으로써 국가를 통치한다”는 以黨治國을 지향했다. 셋째, 국가와 정부를 운영해 나갈 구심체로서 정당을 결성하되 오직 하나, 단일정당을 만든다는 점이다. 소련이나 중국처럼 하나의 정당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즉, 唯一黨을 추진한 것이다. 그럴 경우 임시정부와 이 정당을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논의사항이 된다. 넷째, 민족운동세력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가졌으니, 반일-반제세력의 대통합을 의미한다.

유일당운동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한 차례 시도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중국본토지역과 만주지역 및 국내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몇 편 나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독립운동사 전체에 대한 민족운동세력의 통합운동 혹은 통일운동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니, 이것은 한국사 전체를 동일한 관점에서 조망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좌’와 ‘우’라는 기준축만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라는 축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연구가 진일보하였다. 더구나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역사적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는 이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 유일당운동의 배경과 계기

유일당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임시정부 자체의 배경을 들자면, 무엇보다 먼저 임시정부의 ‘역할가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거론해야 한다. 임시정부가 ‘존립가치’만큼 역할을 소화해 냈더라면, 굳이 정부조직을 두고서 ‘오직 하나의 당’이라는 존재가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까, 민족독립·민족해방이라는 절대명제를 내걸고 정부조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세력이 형성되었고, 또 그러한 주장이 터져 나온 것이다. 어느 정부조직이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더욱이 국토와 주권을 갖고 있는 정부조차도 수립과정이 험난한데, 하물며 이런 경우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할가치에 따른 성과가 나타났다면 술한 암초야 헤쳐 나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으므로 대내외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모두 임시정부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수립 단계에서부터 술한 암초를 품은 채 출발하였다. 수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그 시작점에서부터 반대세력을 배태시켰고, 두고두고 그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노선의 적합성, 대통령 李承晩 선출에 대한 일부의 격렬한 저항, 이승만의 위임청원문제, 연고주의적인 분파성 등은 모두 임시정부의 발목을 잡을만한 주제들이었다. 특히 수립기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날아오는 화살을 견뎌낼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운동계 전체가 참여한 국민대표회의(1923. 1~5)가 상해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 분포한 독립운동조직의 대다수 대표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코민테른의 자금지원 아래 성대하게 열렸지만, 이마저도 임시정부에 대한 처리문제를 두고 창조파와 개조파로 양분되고 말았다. 민족운동의 대통합이 일단 좌절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좌절이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족운동의 대통합이라는 노력은 반일-반제투쟁이 필요한 이상 다시 추진되어야 하는 명제였고, 더구나 독립과 해방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목에 가로놓인 장애물이 있을 때면 더욱 긴요한 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유일당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국내의 투쟁상황 판도 변화도 중요하다. 국내 활동가들 가운데 타협주의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국내 일부 자산계급과 지식층을 중심으로 자치론·참정권·실력양성론·민족개조론 등의 이름을 내건 대일 타협주의 노선과 민족개량주의 풍조가 대두하여 그 세를 불려가고 있었다.¹⁾ 특히 토지조사사업 이후 일제의 정책이 자작농의 몰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소수의 한인 대지주들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지주들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정책 지원자로 자리잡아 갔다. 일제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목소리가 이광수를 비롯한 개량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내뿜어지자, 일제의 통치에 타협하지 않는 강경세력, ‘민족좌파’들은 이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 논리가 바로 비타협주의, 즉 반자치론이었다. 이것은 국내외에 걸쳐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해외 망명세력들은 더욱 강렬했다. 그 가운데서도 1923년에 의열단선언으로 발표된 申采浩의 〈朝鮮革命宣言〉이 대표적인 논조였다. 일진회와 같은 조직이 1910년 병합을 가져온 敵이었다면, 1920년대에 들어 민족을 배신하는 새로운 적이 장애물로 나타났고, 그것이 민족운동조직들을 통합운동 대열에 다시 서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일당운동이 다시 전개되는 배경에 바로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공동투쟁의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유일당운동의 대외적인 배경으로 민족협동전선론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이 논리·전략은 1920년대 초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나타난 사상적인 분화와 갈등을 극복하려는 데서 비롯하였다. 코민테른의 지도와 요구,

1) 김영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족유일당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 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488쪽.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요구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임시정부가 존립해 있던 중국본토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그만큼 영향도 컸다. 그 결과 우리 독립운동계에도 협동전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게 나타났다.

우선 임시정부 내부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사실을 짚어야겠다. 국민대표회의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린 뒤, <이승만의 유고안>을 통과시킨 임시정부는 앞길을 헤아리고 있었다. 192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정부로서의 역할가치를 크게 상실하고 있던 임시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대두된 타협주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임시정부도 좌파 세력을 항일투쟁의 연대세력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해 9월에 李東輝가 이끄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했다가 분리되고, 다시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통합을 시도하다가 다시 나뉘었지만, 또 다시 합작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그 증거가 朴殷植의 유언에서 드러난다. 이승만 면직 직후인 1925년 3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하다가 병사한 박은식은 유언에서 민족협동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이 운동에 대한 임시정부의 자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① 독립운동을 하려면 全族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 ② 독립운동을 최고운동으로 하며 독립운동을 위하여는 어떠한 수단방략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다.
- ③ 독립운동은 吾族 전체에 관한 공공사업이니 운동 동지간에는 愛憎親疎의 別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 귀중한 독립을 期成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전민족이 통일을 요구하여야 되겠오. ... 어떤 나라에나 각 당파의 분열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일을 보는 민족들은 土黨 혹은 朋黨을 짓지 않음이 사실이니, 우리도 이 점에 크게 주의하여 장차 국가대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되겠오(《獨立新聞》, 1925년 11월 11일).

즉 박은식은 이 유언에서 독립운동계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의 선택도 각

분과의 통일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둘째 항에서 “어떠한 수단 방략이라도 쓸 수 있다”고 하여 임시정부 세력이 좌파의 움직임을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했다.

한편 사회주의 세력은 극동인민대표회의의 결의 내용과 같이 계급해방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그 앞 단계로 민족해방을 성취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민족해방을 달성할 때까지의 한시적인 전략이기는 하지만, 일단 우파의 대동통일론과 합치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1926년 1월에 상해에서 여운형·金燦·趙東祐·曹奉岩 등에 의해 조직된 조선공산당 해외부(임시상해부)는 그 첫 사업으로 국민당 건립 계획을 세우고 그 복안을 국내당(2차 조선공산당)에도 전달하였다.²⁾ 그리고 이들은 바로 그 직후 상해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갔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1926년 2월 상해에서 조직한 ‘主義者同盟’이 바로 그것인데, 그들은 2월 13일에 주의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우리 無產同盟과 독립운동과의 연합을 촉진하기에 노력할 일.
1. 내외지를 통하여 진실한 ‘맑스’주의자들(의) 통일적 조직을 완성하기에 적극 노력할 것.
1. 종래의 불순분자를 규합하여 파생적 惡癖을 조장하던 일파가 名實不副○○○○○ 僞名으로써 全朝鮮의 무산계급을 농단하여 운동선의 분열혼돈의 禍端을 作함으로써, 우리는 如斯한 투기와 발호를 철저히 제지 匡正할 것(國史編纂委員會,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8, 探求堂, 1973, 49쪽).

이 결의내용은 사회주의 세력도 민족협동전선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민족협동전선은 독립운동계의 대동통일을 이루어 임시정부의 강력한 옹호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1단계 목표인 민족해방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계급해방을 이루고자 한 좌파의 목적이 합치점에 이른 데서 성립될 수 있었다. 즉 민족주의에서 탈락해 나간 개량주의자들을 일제와 동일한 적으로 파악할 때, 나머지 세력들은 하나의 광장으로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2) 장석홍,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의 통일전선과 6·10만세운동〉(《우송조동결선 생정년기념논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출판, 1997), 756~758쪽.

것과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1925년 5월의 기록을 보면, 북경의 학생조직들도 각 출판물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즉 “兩主義는 그 목적을 달리하면서도 道程을 하나로 함으로써 알력투쟁을 그치고 마땅히 共力一致 혁명의 완성에 절규하지 않으면 안된다”³⁾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이 곧 민족운동세력의 통일운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좌우세력은 합치점을 찾았다. 임시정부쪽은 계급해방에 앞서 민족해방에 목표를 둔 좌파와 결합을 시도하고, 좌파는 개량주의를 배제한 ‘혁명적 우파세력’ 또는 ‘민족좌파세력’이라 불릴 수 있는 세력과의 전략적 합류를 도모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식민지에서는 먼저 민족혁명이 성취되어야 하고, 레닌주의 반제운동론은 식민지의 사회주의자가 민족주의자와 동맹을 맺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코민테른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에 걸맞은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이 현 단계의 유일한 정당 노선임을 천명한 것이다.⁴⁾

국내 독립운동계의 변화, 임시정부의 역할 가치하락과 주도세력의 인식변화, 좌파세력의 협동전선론 수용 등은 중국본토지역에서만 펼쳐지던 일이 아니었다. 국민대표회의의 진행과정에서 이미 이르쿠츠크파가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통일적인 민족혁명당으로서 ‘고려국민혁명당’ 결성을 제의한 바 있고,⁵⁾ 개조파이던 여운형도 단체를 통합한 ‘一大 독립당’ 건설을 제안한 바 있었다.⁶⁾ 이후 연해주로 옮겨간 창조파들이 <한국독립당 조직안>을 내놓기도 하였고,⁷⁾ 이들이 북경으로 돌아온 1924년 7월에는 한국독립당조직축성회를 설립하려고도 했다.⁸⁾ 그러므로 국내외 전반에 걸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던 1923년

3)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8(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1), 115쪽.

4) 金俊樺·金昌順,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청계연구소, 1986), 373쪽.

5) 보이팅스키·이동휘·한명세, <상해 민족대회에 참가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보내는 메시지> (조철행, <국민대표회(1921-1923) 연구>, 《사총》 44, 1995), 167쪽 재인용.

6) 노경채, 《한국독립당 연구》(신서원, 1996), 28쪽.

7) 申肅, 《나의 一生》(일신사, 1963), 81쪽.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1976), 512~513쪽.

8)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8(1971), 116쪽.

이후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대독립당’ 혹은 ‘민족혁명당’을 추구하는 노력이 큰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정리된다.

2) 유일당운동의 추진과 임시정부의 개헌

(1) 임시정부 중심의 대당결성 주장

임시정부측의 유일당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은 1926년 5월 안창호 계열에 의해 펼쳐지기 시작했다. 5월에 상해에서 趙尙燮·吳永善 등이 조직한 獨立運動促成會(촉진회)에 의해 펼쳐지기 시작했다.⁹⁾ 이 같은 움직임은 안창호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는 1년 10개월의 미국체류를 마치고 다시 상해로 돌아오는 데 매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는 임시정부가 5월 8일에 안창호를 국무령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한 것 같다. 1년 10개월만에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며 그 터를 다지는 작업을 벌인 것이며, 또한 안창호가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남북만주를 오르내리며 벌이던 민족운동세력의 통합이라는 활동 성향과 안창호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조상섭·오영선·崔昌植·李裕弼 등의 발기 아래 조직된 이 단체의 회장에 安恭根이 선출되었다. 이 회의 “과거에 있어서의 운동의 실패를 시정하고 장래의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국 민족해방을 촉진하기 위해 철저한 독립운동자의 조직적 대단결의 실현을 기성하려고 노력한다”는 강령하에 선언서를 발표했다.¹⁰⁾ 이러한 노력이 안창호가 상해에 도착한 직후부터 펼쳐지는 민족운동세력에 대한 통일운동의 바탕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쉽게 헤아릴 수 있겠다. 그러나 5월 26일에 상해에 도착한 안창호는 국무령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재야에서 자유롭게 통일운동에 나서기를 원했다.

임시정부측의 대당결성 움직임은 7월에 들어 다시 거론되면서 이전과 달리 공식화되었다. 1926년 7월 8일이 임시정부로서는 중요한 날이었다. 상해

9)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關係年表》(朝鮮總督府, 1930), 201쪽.

10)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598쪽.

와 남경 사이의 조그만 도시 鎮江에 머물던 洪震이 상해로 와서 국무령으로 취임한 날이며, 안창호가 대동단결과 ‘대혁명당’조직을 천명하고 나선 날이다. 이승만 면직 이후, 박은식이 대통령직을 이었다가 순국하였고, 남만주의 대표자 이상룡이 국무령이 되었다가 반년만에 물러난 뒤를 다시 홍진이 이었다. 임시의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국무령 홍진은 정부차원의 시정방침으로 <3대 강령>을 제시하면서 대동 단결된 정당체 조직을 천명하고 나섰다.

- ① 비타협적 자주독립의 신운동을 촉진할 것.
- ② 전민족을 망라하여 공고한 黨體를 조직할 것.
- ③ 전세계피압박민족과 연맹하여 협동전선을 조직하는 동시에 또 연락이 가능한 우방과 제휴할 것(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615쪽).

홍진은 이상과 같은 강령을 통해 뚜렷한 두 가지 명제인 ‘비타협적 운동’의 전개와 ‘대당결성’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움직임은 독립운동계에 영향을 미쳐, 비타협적 운동과 대당결성의 추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같은 날, 7월 8일 저녁 宋秉祚 · 金鍾商 · 徐大宇 · 韓鎮教 · 金甫淵 · 許雲 · 黃勳 등의 발기로 연설회가 상해 三一堂에서 열렸다. 그 연설문이 10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던 《新韓民報》995호부터 998호까지 4회로 나누어 게재되었는데, <대혁명당을 조직하자 임시정부를 유지>라는 것이었다. 이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안창호는 대혁명당을 조직 · 완성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창호는 자기가 말하는 민족혁명에 대해 “이민족의 압박적 현상을 파괴하고 본 민족의 자유적 현상을 건설하자는 철저한 각오하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치적 혁명이나 경제혁명이나 종교혁명과 같은 부분적 성질에 있지 않고 우리 민족으로는 누구나 다 같이 어떤 혁명분자나 다 같이 힘을 결심을 하여야 할 것이외다”라고 밝혔다.¹¹⁾ 그러면서 그는 혁명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1) 《新韓民報》, 1926년 10월 4~28일, <대혁명당을 조직하자 임시정부를 유지>

우리의 혁명사업이 성공되도록 하는 데는 제1은 대혁명당을 조직하여야 하겠고, 제2로는 대혁명당이 조직되기까지 임시정부를 어떻게든지 붙들어 가야 할 것이외다. 대혁명당이 조직되는 동시에 임시정부보다 더 큰 어떤 조직체가 생기면 그 때에는 그만 둔다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자체의 내부로서 드러내놓고 임시정부를 집어치운다하면 우리의 운동은 부흥시켜 질 여지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즉, 임시정부를 붙들어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땅히 할 책임으로 알고 일치 협력하여 대조직체가 실현되기까지 유지하여 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新韓民報》, 1926년 10월 4~28일, 〈대혁명당을 조직하러 임시정부를 유지〉; 《한국근현대사연구》 8, 1998, 231~232쪽).

이처럼 안창호는 혁명 즉,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一大革命黨을 결성해야 하며 민족협동전선의 결성방법으로 중국국민당과 같이 대당을 조직하여 ‘以黨治國’의 형태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어서 임시정부의 생명을 영구히 유지해야 하며 정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은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으로 결집된 힘을 임시정부의 옹호에 쏟아 부으려는 유지파들의 자세를 대변해 주었다. 그렇다면 일대혁명당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앞서서도 본 것처럼 유일당·민족유일당·유일독립당 등으로 일컬어졌는데, “以黨工作으로써 독립혁명운동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²⁾ 이것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자들이 하나의 기치 아래 모이고 하나의 호령 아래 모여야만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¹³⁾ 유일당을 결성코자 했던 독립운동자들은 이당치국의 우수성이 이미 소련의 공산당·중국국민당·아일랜드의 신펜당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안창호와 홍진의 활동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이 축성회 결성을 위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선도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비록 쇠약해지기는 했으나 임시정부 중심의 민족주의 세력이 당시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전선통일을 위한 이들의 노력

(《한국근현대사연구》 8, 1998), 226쪽(현재의 맞춤법에 맞게 고침).

1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大韓民國公報處, 1956), 146쪽.

13)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110~111쪽.

은 국내 신간회운동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으며, 국내외의 민족협동전선 결성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¹⁴⁾

(2) 대독립당조직북경축성회 결성

안창호는 대당결성을 위해 먼저 북경을 공략하였다. 사실 북경은 임시정부의 반대세력이 집결해 있던 곳으로, 유일대당을 결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임시정부 존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속해서 임시정부 해체를 요구하는 인물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 시도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첫 대상으로 북경을 잡았고, 1926년 8월과 9월에 북경의 유력자이며 좌파세력의 대표인 元世勳을 만나 대동단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 만남이 곧 축성회 결성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접촉이었다. 兩人은 유일당의 결성에 대하여 각지에 먼저 세포조직을 설치한 후, 그를 통일하여 대독립당을 결성하는 방법에 일치점을 보았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3차에 걸친 회합을 갖고, 같은 달 16일에 선언서를 발표하여 大獨立黨組織北京促成會(이하 ‘북경축성회’라 함)의 창립을 보았다.¹⁵⁾

북경에서 발표된 선언서에는 러시아의 무산혁명자가 공산당의 기치하에 모인 것과 중국의 혁명자가 국민당에 그리고 아일랜드의 혁명자가 신펜당으로 집결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당적 결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일계급·일국민·일민족의 행복과 자유를 생각하는 동서의 혁명자들이 각각 일정한 주의·강령과 훈련·규율하에서 일당에 결합하는 것을 明證하는 것이다.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혁명을 완성시키는 것과 역시 같은

14)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유일당운동이 무르익던 무렵인 1927년에 초에 만주로 대표를 파견하여 협동전선운동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그러한 점은 2월 25일에 滿洲 撫松縣 板項子에서 임시정부 대표 9명이 고려공산당 대표 3명, 北滿學生團 대표 6명 및 기타 단체 대표 4명 등과 함께 회합을 갖고,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당분간 일치행동을 취하여 ○○의 ○○을 촉진할 것” 등 4개 조항을 결의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國史編纂委員會,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8, 탐구당, 1973, 407쪽. 빈칸의 내용은 ‘戰線統一’이거나 ‘大黨結成’일 듯하다).

15)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앞의 책, 109~110쪽.

것으로 세계일당의 원칙하에 그 총참모부이고 대본영인 第三國際黨의 붉은 기치하에 모이는 것은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바 아닐까(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10~111쪽).

이 글은 북경축성회의 구성원들이 소련·중국과 같이 ‘以黨治國’의 형태로 민족협동전선을 결성코자 한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아울러 이 글은 북경축성회의 구성원들이 좌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북경축성회의 선언은 또 “혁명이 혁명사상의 필연적인 途程과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¹⁶⁾고 했다. 선언은 이어서 “단결이 약자의 무기라는 말은 자명의 진리이지만, 그 단결의 길은 일시적 권모술수에 있지 않고 다만 정대한 주의와 光明磊落한 정신을 근거로 한 당적 결합에 있는 것을 믿는다”¹⁷⁾라 하여, 독립운동의 앞길이 일당의 결집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따라서 이들은 대당결성을 위해 북경축성회를 조직한 것이라 했다.

끝으로 북경축성회는 “한국혁명동지는 당적으로 결합하라”, “민족혁명의 유일전선을 作하라”고 하여 대당의 결성을 전선통일의 방법으로 내세웠다.¹⁸⁾ 이러한 구호는 좌파세력이 민족협동전선 결성의 구체적 방법으로 일대당 즉 유일당의 결성을 주장했던 사실을 나타낸다.

선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창호와 원세훈은 분명히 큰 골격에서 합의 를 보았을 것이다. 안창호가 7월 8일 삼일당 연설에서 제기했던 ‘대혁명당 조직과 그때까지 임시정부 유지’라는 원칙에 원세훈이 합의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경에 포진하고 있던 “창조파로서는 임시정부의 존치를 용인하는 대신에 상해의 유지파까지도 참여시켜 유일독립당을 신속히 ‘창조’해 내는 것이 그들이 본래 지향했던 ‘전투적 독립운동’이념을 구현시킬 첩경이 될 것이기에, 원세훈은 그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였을 것이다.”¹⁹⁾

그리고 회원의 조직은 집행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시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6)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위의 책, 111쪽.

17) 위와 같음.

18) 위와 같음.

19) 김영범, 앞의 글, 496쪽.

① 집행위원

元世勳・曹成煥・朴健秉・裨天澤

② 일반회원

姜扶弱(姜九禹)・金廣善・金雲坡・金有成・金人濟・金一成・金贊・金海山・
權敬止・李光・李贊・朴海觀・宋虎・裴雲英・申翼熙・尹憫樞・元興・黃郁
(黃一山)(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11쪽).

북경에서 대당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자 상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1926년 11월 《獨立新聞》에 金生이란 필명으로 <자치를 몽상하는 자에>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은 倭政府의 자발에 의해 독립이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망발의 최상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오직 우리 민족의 熱血로서만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했다.²⁰⁾ 또 같은 일자의 《독립신문》에 게재된 <청년과 혁명>이란 글은 “혁명에 성공할 청년들이여, 오직 우리의 민족혁명이라고 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대동결당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²¹⁾라고 하여 청년들에게 혁명의 방법으로 대당결성을 촉구했다.

(3) 임시정부 개헌과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 결성

북경촉성회의 결성 영향은 상해에 그대로 파급되었다. 북경촉성회 성립 직후 11월에 국내에서 <正友會宣言>이 나왔고, 그 골자인 방향전환론이 전해지면서 유일당 결성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촉진되었다.²²⁾ 임시정부는 여기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제 개편이 필요했다. 국무령 취임식에서 ‘전민족을 망라하여 공고한 당제 조직’을 내걸었던 홍진은 그 자리를 사직하고 재야에서 유일당 발기를 위해 움직였다. 이를 이어 1926년 12월 13일에 국무령에 취임한 金九는 대혁명당 조직을 내다보면서 政體變更을 위한 개헌에

20) 《獨立新聞》, 1926년 11월 3일.

21) 위와 같음.

22) 1926년 11월 15일에 국내의 正友會가 발표한 선언에 대하여 상해의 ‘社會主義者同盟’(주의자동맹인 뜻-필자)은 이에 찬성키로 했다(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323쪽).

착수했다. 이미 안창호의 연설이 대혁명당 결성까지 임시정부를 유지하자고 했으니, 이를 뒤집어 보면 대혁명당이 결성되면 임시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한 상황을 가늠하면서 이에 대응할 헌법을 마련하자는 것이 김구의 의도요, 임시정부 유지자들의 생각이었다.

김구는 “현재의 제도로는 내각을 조직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臨時約憲〉의 개정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金甲・李圭洪 등이 기초한 개헌안이 1927년 2월 15일 임시의정원을 통과함으로써 3차 개헌이 달성되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1927년 4월 11일자로 발표된 3차 개헌을 통해 ‘以黨治國’의 노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헌법 제2조의 단서에 “단,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黨이 완성될 때는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²³⁾라고 명시하고, 또한 제5장 보칙 제49조에서는 그 당이 완성될 때 헌법 개정도 거기에서 하도록 규정했다.²⁴⁾ 즉 ‘이당치국’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 그 핵심인데, 이것은 대혁명당, 유일당이 건설되면 최고 권력기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조직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결국 임시정부 유지파들은 유일당으로 정부를 유지하자는 것에 합의하면서도 정부조직 자체는 유지해 나가자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로서는 혁명적인 자세 전환을 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청년들이 1927년 3월 26일 상해 三一堂에서 상해한인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청년의 鞏固한 단결과 분열된 전선의 통일을 기할 것과 독립운동의 유일당이 속히 완성되기를 노력한다”는 등의 강령을 채택했다.²⁵⁾

한편, 상해지역의 좌파 세력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1927년 3월에 화요회계의 洪南杓과 ML계의 鄭栢이 대당결성의 준비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좌파의 양대 세력이 결속한 가운데 상해축성회 결성을 위한 모임이 있게 되고, 그 결과 좌우세력을 대표하여 홍진・홍남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전민족적독립당결성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3월 21일에 삼일당에서

23) 韓詩俊 編, 《大韓民國臨時政府 法令集》(국가보훈처, 1999), 56쪽.

24) 韓詩俊 編, 위의 책, 61쪽.

25)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422쪽.

창립총회가 거행되었다.²⁶⁾ 이 창립총회에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일당의 조직을 축성할 것과 민족의 독립적 역량을 집중함에 노력할 것 등의 강령을 결의하고 조직을 마쳤다.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다.²⁷⁾

- ㉠ 洪震・李東寧・李圭洪・趙尙燮・趙琬九・羅昌憲・崔錫淳・崔昌植・金澈・金甲・吳永善・安泰(恭-필자)根・金九・尹琦燮・宋秉祚・金奎植
- ㉡ 洪南杓・曹奉岩・黃勳・康景善・金料奉・鄭栢・玄鼎健・李敏達(朝鮮總督府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05쪽)

집행위원 24명 가운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가 ㉠의 16명이며, ㉡의 8명이 사회주의 계열이다. 특히 임시정부의 국무령과 국무위원 전원(김구・윤기섭・이규홍・김철・오영선・김갑)이 그 일원으로 포함된 사실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고, 임시정부가 유일당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정부를 운영해 나가려는 방침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록 좌우합작을 이루었지만,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둘러싼 유지파 세력이 사회주의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자 8명 가운데, 洪南杓・曹奉岩・黃勳・姜景善・金料奉 등 5명은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이거나 화요회 계열이고, 정백과 玄鼎健은 상해파이면서 ML 계열이었다. 여기에서 좌파 가운데에는 화요회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열단의 선언과 광동・무한・남경축성회 결성

북경에 이어 상해에서 1927년 3월에 상해축성회가 성립되자, 5월에는 의열단이 <독립당축성운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상해축성회가 성립된 직후에 발표된 것으로 結黨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방법 문제까지 제기했고, 광동축성

26) 창립일에 대해 3월 21일 설, 3월 31일 설, 4월 11일 설 등 세 가지가 있다. 모두 10일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확실하지 않아 일단 3월 21일로 파악하고자 한다.

27) 아래의 A, B 분류는 金喜坤・韓相禱・韓詩俊・兪炳勇,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25쪽.

회 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언은 먼저 “全運動線의 시대적 상황이 과거의 착오를 깨닫고 새롭고 완전한 진로를 도모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하고서, 그것이 곧 “독립운동의 통일 및 통일적 당조직 운동, 대독립당축성운동”이라고 했다.²⁸⁾

〈의열단선언〉은 이어서 종래의 착오와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일된 당조직의 방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²⁹⁾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되지 않고 여하한 방법으로가 문제이다. 從하여 통일적 당을 조직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조직 방법이 문제이다. 과연 여하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통일하고 독립당을 조직할 것인가는 一般戰員의 고심하는 문제였다(李鉉淙, 《近代民族意識의 脈絡》, 아세아문화사, 1979, 245쪽).

또 이 선언은 독립당축성운동에 대하여 세 가지의 상황을 지적했다. 그 내용은 “첫째, 일본의 학살과 세계피압박민족해방전쟁 등의 객관적 조건이 독립당축성운동을 강하게 촉진하고 있다. 둘째, 과거 수차의 통일적인 모임이 분열된 것에서 오는 주관적 경험이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 셋째, 현대 과학적 이론과 혁명의 방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고, 이 신청년이 출마하여 全運動을 지배하게 되었다”³⁰⁾라고 하는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 판단은 주변 정세와 독립운동자의 경험이 독립당축성운동을 가능케 하리라고 했다. 특히 세번째 항의 주장은 좌파의 청년운동을 고무시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의열단은 축성회의 형식으로 통일적 중추기관, 즉 대당을 결성

28) 李鉉淙, 《近代民族意識의 脈絡》(아세아문화사, 1979), 245쪽.

29) 의열단이 이 선언에서 제기했던 조직 방법 문제는 결국 1929년 말에 가서 좌파 세력에 의해 해체의 명분으로 사용되었다(축성회의 해체 부분에서 후술함). 특히 만주에서는 조직 방법의 차이로 결렬되었는데, 하나의 주장은 기존단체를 부정하고 唯一黨을 수립하고자 했고, 또 하나는 기존단체를 인정하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협동전선을 건설하자는 내용이었다. 전자는 개인본위조직론으로 全民族唯一黨組織促成會를 만들었고, 후자는 단체중심조직론으로 全民族唯一黨協議會를 결성함으로써 만주의 독립운동계는 양분되었다(丁原鈺, 〈在滿抗日獨立運動團體의 全民族唯一黨運動〉, 《白山學報》 19, 1975, 197~198쪽).

30) 李鉉淙, 앞의 책, 247쪽.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체 단원이 개인자적으로 가입하여 대당결성 즉시 단을 해체한다고 하여 개인본위의 방법을 지지했다. 이로써 의열단은 대당결성의 방법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만주와는 달리 상해 독립운동계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거론되지 못한 듯하다.³¹⁾ 특히 이 현상은 국내의 신간회에 대하여 ML계열이 시기에 따라 ‘민족단일당론’, ‘대중적 협동전선론’, ‘반제협동전선론’ 등으로 전술을 전환시켜 나간 것에 비교해 보면,³²⁾ 중국관내에서의 그것은 각지 축성회의 결성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국내의 ‘민족단일당론’에 해당하는 ‘유일독립당론’을 줄곧 고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³³⁾

〈의열단선언〉이 발표되던 5월 8일, 광동축성회가 조직되었다. 의열단의 주

31) 이러한 사실은 1929년 10월에 발표된 〈상해축성회 해체선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을 통하여 밟아 온 독립조직운동을 회고하면 그 어느 방법론계를 불문하고 속히 여하한 강령으로 독립당을 조직하여 보자고 하는 표시가 없었던 일, 일각도 휴식할 수 없는 혁명선에서 오로지 독립당을 조직한다는 것뿐이며 독립당을 조직하기까지 어떠한 투쟁을 하자는 것을 설명한 일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空漠한 생각이며 전혀 대중과 격리된 운동에 불과하다”(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35쪽).

32) 李賢周, 〈新幹會에 참여한 社會主義者들의 運動論—ML黨系를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1989), 75~116쪽.

국내의 사회주의 세력이 추구하던 조직형태는 신간회 출범 무렵의 ‘민족단일당의 매개형태’에서 1927년 11월 이전에 ‘민족협동전선당의 매개형태’로 바뀌었고, 또 제6회 코민테른대회(1928. 7~9)가 〈식민지·반식민지 제국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에 대한 테제〉를 통해 신간회의 당적 조직형태를 부정하고 ‘협의 체적 공동전선’을 요구하게 되자, ‘민족협동전선의 매개형태’로 바뀌었다(李均永,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266~267·284~285쪽).

상해에서 국내의 통일전선전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던 인물에 韓偉健이 있었다. 4차 조선공산당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28년 중반에 상해로 망명한 그가 1930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 직전까지 李鐵岳이란 필명으로 《계급투쟁》을 발간하여 국외에서 국내 ML계열을 지도하고 있었다(水野直樹, 〈韓偉健〉, 《朝鮮民族運動史研究》 1, 1984, 204~206쪽; 〈韓偉健〉(追補), 《朝鮮民族運動史研究》 3, 1986, 242~244쪽). 이론적 지도자였던 그가 망명 이후에 중국관내의 민족협동전선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33) 그러나 1929년 5월에 한위건은 ML당 계열의 운동론으로 ‘대중적 협동전선론’을 제시했다(李鐵岳, 〈朝鮮革命의 特質과 勞動階級 전위의 當面任務〉, 《계급투쟁》 창간호, 1929, 14쪽). 이 논리는 곧 ML파가 유일당운동을 중단시키는 것인데, 이 운동론은 1929년 11월에 발표된 〈상해축성회 해체선언〉에서 다시 재론되었다.

도로 열린 대독립당조직광동축성회는 金星淑이 상해에서 북경축성회의 집행위원인 張健相과 면회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5월 8일에 김성숙은 鄭學彬과 함께 170여 명의 회원을 규합하고서 대독립당조직광동축성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광동에 집결해 있던 의열단의 중심인물들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5월에 〈독립당축성운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선언은 “광동축성회 결성 추진 및 마지막 단계에서 축성회 및 축성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작성,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³⁴⁾

한국유일독립당무한축성회도 같은 해에 의열단원인 朴建雄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³⁵⁾ 늦어도 7월 10일 이전, 아마도 7월 초 무렵에 조직된 것으로 추정되며, 회원이 150명에 달하였다.³⁶⁾ 그리고 남경축성회는 가장 늦은 1927년 9월 27일에 金一柱를 중심으로 창립회원 30명이 모인 가운데 조직되었다.³⁷⁾ 앞의 해 10월에 북경축성회가 결성된 지 1년이 채 못되어 중국관내지역 5개 중심도시에서 지역별 결성을 마친 것이다.

3) 유일당운동의 발전과 임시정부 참여

(1) 한국독립당관내축성회연합회의 결성

1927년 가을에 들면서 5개 도시에 유일당축성회가 결성되자, 다음 수순을 가늠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의 일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결합을 위한 움직임은 북경축성회가 1927년 9월에 중국관내에서 성립된 각지 축성회의 연합회 결성을 상해로 교섭해 옴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교섭에 따라 상해축성회는 연합회 출석대표로 이동녕·홍진·김두봉·홍남표·조소앙을 선출했다. 그리고 각지에 교섭하여 1927년 11월 9일 상해에서 ‘한국독립당관내

34) 김영범, 〈1920년대 후반기의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한 재검토〉(《한국근현대사연구》 1, 1994), 113쪽.

35)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앞의 책, 108쪽.

36) 김영범, 앞의 글(1994), 113쪽.

37)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329쪽.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앞의 책, 106쪽.

축성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를 개최하였다. 이에 참석한 각지축성회와 대표자 및 회원의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한국독립당관내축성회연합회 개황

단 체 명	대 표	창립 시기	회원	비 고
대독립당조직 북경축성회	曹成煥	1926. 10. 16	40	기관지 促成報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	陳德三(洪南杓)	1927. 4. 11	160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대표는 좌파인물
대한독립당 광동축성회	鄭學彬(有隣)	1927. 5. 8	170	의열단 영향 큼
한국유일독립당 무한축성회	朴建雄 白德林	1927. 7월초	150	의열단원 다수
한국유일독립당 남경축성회	金一柱 金秀靑	1927. 9. 27	30	의열단원 다수

* 金正明, 위의 책, 329쪽.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앞의 책, 106・109~111쪽.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文化社, 1966), 410쪽.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21쪽.

이 연합회는 1927년 11월 22일의 본회의에서 채택한 선언서를 통해, 지금까지 광복운동단체의 숫자가 적지 않았으나, 그 성격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운동방법이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민족의 운동역량을 총집중시킨 유기적 통일기관이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했다. 그래서 ‘대독립당’·‘민족단일당’ 등이라고 하는 대동조직이 필요했고 또 긴급했기 때문에 각지에서 축성회를 성립시켰다고 하고, 아울러 이 연합회는 다음 순서가 黨組織籌備會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연합회는 각지축성회를 연결하여 유일당의 조직을 준비할 모임을 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³⁸⁾

38)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앞의 책, 106쪽.

이 선언은 이어서 독립운동의 興廢가 당조직 여부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以黨治國’의 개념을 도입한 유일독립당 결성의 의지를 밝혔다.³⁹⁾ 그리고 〈규약〉 16조에서 독립당주비회가 성립될 때에 연합회를 해산한다고 했으니, 이 과정이 곧 축성회 주도자들이 생각한 독립당 조직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또 연합회는 만주·노령·미주 등지에도 축성회 설립을 촉구하기로 하고, 먼저 만주지역에 대표 2명(상해 1명, 북경 1명)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⁴¹⁾ 그리하여 홍진과 鄭遠(鄭世鎬)이 1928년 1월 초에 吉林省 磐石縣에 파견되어 분열되어 있던 在滿 각 단체의 통일을 종용하였다. 한편 홍진은 만주로 가서 그곳에서 조직된 한국독립당의 주역이 되었다. 그의 활동은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상해에서 파견된 목적을 달성코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의 조직에는 전체회원이 모이는 대회, 15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 및 5인으로 구성되는 상무위원회가 있었다. 집행위원은 박건병·裴天澤·장건상(이상 북경)·崔秋海·咸聲(이상 광주)·張聖山·김일주(이상 남경)·許悅秋·崔圓(이상 무창)·진덕삼(홍남표)·홍진·현정건·조소앙·김두봉(이상 상해) 등 15인이었다. 그리고 상무위원은 진덕삼·홍진·김두봉·배천택·장건상 등 5인이었다.⁴²⁾

연합회의 성립에 중국본토지역의 독립운동계가 총망라하여 참가했다. 거기에는 상해·북경·남경·광둥·무한 등 각 지역의 대표만이 아니라 홍진을 비롯한 임시정부계열과 박건병·배천택 등의 북경 중심의 세력,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 가운데 이르쿠츠크파·화요회파 계열과 상해파·서울청년회파 등 각 계열의 독립운동자들이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합회가 개최되던 시기에 상해에서 발행된 《新道》라는 잡지에

39)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21쪽.

40)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19쪽.

41) 규약 3항(2); 만주·노령·미주 기타 각지에 인원을 파견 또는 公函을 발송하여 축성회 설립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18쪽).

42)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19쪽.

는 〈한국유일독립당의 축성에 대하여〉라는 선언이 게재되었다. 이 글은 당시의 전선통일에 대한 이론을 집약한 것이었다.

산만 무통일한 각 소단체의 분립으로부터 조직적·통일적·전민족적 결합을 축성하고, 국부적 경제투쟁—자연발생적 운동—으로부터 전민족적 정치투쟁—目的的 運動—을 절규하기에 至하다. 그리하여 전자는 此 민족운동의 전선통일에 관한 노력으로서, 후자는 正히 공산주의의 전선확충에 대한 吶呼이다(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4, 1968, 874쪽).

이 글에서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운동계를 통일하여 결집된 힘으로 민족운동에 나서자는 목적을 가졌으나, 좌파세력은 전민족적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이라는 〈正友會선언〉과 그 軌를 같이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서로 일치하는 데서 민족협동전선 조직의 원칙이 성립되고 이에 의해 ‘勞農群衆’을 기반으로 혁명역량을 총집중하여 계급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2) 전위조직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의 성립

1927년 11월에 연합회의 성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同會의 전위가 될 목적으로 ‘中國本部韓人青年同盟’(이하 ‘중본한청’이라 함)이 조직되었다. 기존 단체인 ‘上海青年會’(상해한인청년회인 듯)가 1927년 12월 4일 제4회 임시총회에서 “청년회의 진보 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청년회의 연맹을 필요로”하여 상해·남경·북경·광주·무한의 다섯 지역 청년회 대표와 협의한 결과 중본한청을 창립했다고 밝혔다.⁴³⁾ 이어 5일에 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조직 및 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중앙집행위원장 邊長城(邊東華)을 비롯한 23명의 대표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중심인물은 鄭泰熙·李寬洙·金基鎭 등이었다.⁴⁴⁾ 구성 인물을 보면 좌파인물이 상당히

43)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28쪽.

44) 23명의 대표는 상해지부 대표 邊長城(邊東華; 위원장)·鄭泰熙·李寬洙(崔煥)·金基鎭·嚴恒燮·鄭遠(鄭世鎬) 등 11명, 북경지부 대표 金英植 등 5명, 광둥지부 대표 鄭學彬(鄭有隣)·咸聲(吳成崙)·崔秋海·張志樂 등 5명, 무창지부 대표 陳甲秀 1명, 남경지부 대표 金秀靑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國會圖書館, 《韓國獨

진출해 있고, 특히 화요파가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맹의 조직은 상해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의 지회로 구성되었는데, 각 지역의 청년회를 지회로 개조토록 했다.

이 동맹은 “한국독립 및 세계혁명의 이론과 실제적 진술을 討究樹立하여 그 실현을 도모한다”는 강령에 이어 〈선언서〉를 발표했다.

현실에 직면한 한국민족은 종래의 지식계급, 중산계급을 주력으로 한 반향 운동으로 노동대중을 주력으로 하는 각 계급층의 반향요소를 결합하여 全線의 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재래의 봉건적 투쟁과 부분적 組合主義의 경제투쟁에서 전면적 정치투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혁명을 광대히 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유일당을 노동자와 농민대중의 위에 세우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現下 생산과정에서 잔존한 봉건층으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餘弊와 불순한 투쟁을 버려야 할 것이다. … 종래로부터 민족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혁명역량을 살해하는 파벌주의와 地方割據爭權에 대한 배격과 온갖 기회주의자의 정체를 폭로하여 민중의 진정한 진로를 열어야 할 것이다. …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621~622쪽).

이 동맹은 선언을 통해 정치적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과 노동자와 농민대중의 기반 위에 투쟁하기를 주장했다. 이들의 구성과 이념을 살펴보면, 중본한청의 주도권이 좌파 세력에게로 기울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좌파 세력이 화요회계열과 ML계열이 모두 참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동맹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 ① 만주청년단체와 연락하여 재중국한인청년총기관을 조직할 것.
- ② 内地・日本・美洲 기타 각지 청년단체와 유기적 활동을 취할 것.
- ③ 한국청년회 총본영인 한국청년총동맹의 一支隊의 임무를 행할 것.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4, 청계연구소, 1986, 269쪽).

이 〈결의안〉은 중본한청이 만주의 청년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한국 청년총동맹의 支隊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사실을 나타낸다. 이 결의에 근거

하여 중앙집행위원인 鄭遠을 1928년 1월 상순에 만주로 파견하여 각지 청년 단체들과 접촉하게 하였는데, 만주에서도 이미 1927년 8월에 海林에서 개최한 남북청년단체대표협의회 이래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전중국의 항일청년운동기관을 결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해의 중본한청과 만주의 각 청년단체들 사이에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원과 韓哲(남만청년총동맹 집행위원장)이 그에 대한 창립준비를 진행하고, 마침내 1928년 4월 20일에 발기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는데, 참가단체는 북만청년총동맹·남만청년총동맹·중국본부한인총동맹(재상해)·淞江청년총동맹·哈長청년동맹·麗(勵)新청년동맹 외 1개 청년동맹이었다.⁴⁵⁾

이들은 1928년 5월 27일에 滿洲 吉林省 盤石縣에서 在中國韓人青年同盟을 성립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문제에 대하여 “일반노동자와 농민으로 하여금 품조식을 촉진하여 계급적 의식을 각성케 하고 정치적 의식을 보급시켜 전민족적 정치운동의 주력부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⁴⁶⁾ 또한 동맹은 창립대회에서 채택한 당면 투쟁슬로건을 통하여 정치·경제·교육·사회 등 4개 부문에 대해 주장을 펼쳤는데, 특히 정치 부문에서 자치권과 공민권의 획득을 주장했다. 이것은 당시 만주에서 전개된 민족주의 계열의 주된 운동이 무장독립운동과 반일자치운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진영과 제휴하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슬로건으로 채택했다.⁴⁷⁾ 자치권 획득이란 당시 東三省 정권 및 남경정부와 교섭하여 만주에서의 한인추방정책을 철회시키고 자치권을 확보하며 또 국민당 세력과 제휴하여 반일독립운동을 진행하려던 운동으로, 주로 민족주의 세력의 운동이었다.

이러한 강령에도 불구하고 좌파세력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좌파세력 가운데서도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을 장악하고 있던 ML계열이 화요회계열을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이것이 유일당운동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45) 金俊燁·金昌順, 앞의 책, 269~270쪽.

46)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25쪽.

47) 金俊燁·金昌順, 앞의 책, 275~276쪽.

4) 유일당운동의 중단과 임시정부의 여당 결성

1928년에 들면서 유일당운동이 담보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후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1928년 중반부터 1929년 10월의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이하 유호동맹)의 결성까지, 다음 둘째 단계는 유호동맹과 한국독립당이 분립했으면서도 협동전선운동의 여진이 남아 있던 1931년 말까지이며, 마지막으로 1931년 말에 유호동맹이 해체되어 협동전선운동의 한쪽 편 상대가 없어진 시기이다.⁴⁸⁾

첫 단계는 다시 작은 두 단계로 나뉜다. 1928년 중반 이후 1929년 후반기 초입까지인 첫 시기에는 두 가지 구도로 나타났다. 하나는 좌우의 분립구도이며, 또 하나는 좌파 내부의 화요파와 ML파의 분립구도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1929년 후반기에 나타난 것으로 화요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ML파가 승세를 타면서 국제주의로 몰입하던 시기였다.⁴⁹⁾

먼저 유일당운동이 좌초에 부딪치는 첫 단계는 1928년에 나타났다. 그 하나의 요인은 좌우익 진영의 갈등이었다. 1927년 12월 광주에서의 공산주의 폭동사건⁵⁰⁾ 이래 한국인 공산당원이 상해로 도피해 오게 됨에 따라, 이들의 세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결집된 공산주의 청년들이 여기에 대거 가세하여 민족주의세력에 압박을 가하면서, “다수 공산계 청년 회원을 가진 축성회를 유인하여 임시정부 및 기타 제 단체를 통일하여 공산

48) 金喜坤, <1930년대 초 상해지역 한인공산주의자의 동향—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47, 1993), 169~194쪽.

49) 김영범은 유일당운동이 좌초에 부딪치는 원인을 좌우분립구도로만 보아 왔던 김희곤의 견해를 진일보시켜 좌익진영 가운데서 화요파와 ML파의 갈등 구조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추가시켰다. 따라서 본고는 1929년의 유일당운동에 대해 김영범의 연구성과를 참고한다(김영범, 앞의 글(1994), 127~133쪽).

50) 이것은 1927년 12월 11일에 中國共產黨 廣東省委員會 지도하에 무장봉기하여 廣東市에 인민정권을 수립한 사건이다. 廣州公社라고도 하며 파리코뮌을 모방하여 광동코뮌이라 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인 張太雷와 사관교육연대를 지휘하는 葉劍英 및 코민테른 대표인 26세의 하인츠 노이만 등이 지휘한 이 봉기는 13일 오후에 봉괴되고, 3일간의 혼란 끝에 무너졌다(佐伯有一·野村浩一 外 著, 吳相勳 譯, 《中國現代史》, 한길사, 1980, 358쪽).

제하의 대단체를 건설하려고” 하였다.⁵¹⁾ 여기에 국내에서 상해로 망명한 安光泉과 韓偉健의 경우나 광둥에서 진출해 온 의열단의 세력도 덧붙여졌다. 이에 따라 1928년 중반에는 축성회와 이의 전위적 청년단체인 중본한청은 좌우익세력의 결합이란 외적상태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양분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은 동상이몽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 전자는 대당결성을 통한 민족운동계의 통일과 임시정부의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이에 반해 후자는 일시적 전술로 전선통일을 상정하고 자파 세력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후자는 전자에 비해 전략적인 면에서 비교적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축성회는 민족운동을 위해서 결집된 조직이라는 당초의 목표와 강령과는 달리 서로의 세력을 확충 또는 방어하는 자세로 바뀌어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다. 즉 1928년부터 나타난 좌우 분립구도는 “우익진영이 ‘전민일치’의 중앙집권적 대독립당 결성을, 좌익진영은 노동대중의 이해와 입장에 기초한 ‘전투적 협동전선’ 내지 ‘혁명적 통일전선’의 결성을 주창하면서 나뉘었다.”⁵²⁾

또 하나의 요인은 화요파와 ML파의 갈등이었다. 그것은 좌파 해계모니 전략의 즉각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립 구도로 나타났는데, “화요파(중본한청)가 우파와의 ‘결합’을 우선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했다면, ML파(재중한청)는 우파와의 ‘분리’와 해계모니 전략의 상시적 및 즉각적인 적용을 강조하여 날카로운 대립을 보인 것이다.”⁵³⁾

좌파의 양대 세력이 분열 구도로 나서기 시작한 모습은 재중국한인청년동맹(이하 재중한청)의 성립에서부터 드러났다. 재중한청을 장악한 ML파가 이 동맹을 성립시킨 날(1928년 5월 27일) 보다 하루 앞선 26일에, 그것도 같은 지역인 길림성 반석현에서 조직방법론의 차이를 이유로 전민족유일당조직축성회의를 결렬시킴으로써 일단 유일당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이어서 상해를 중

51)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33쪽.

52) 김영범, 앞의 글(1994), 128쪽.

53) 위와 같음.

심한 중본한청의 장악으로 행로를 바꾸었다.

재중한청의 주도권을 장악한 ML파는 상해의 중본한청을 장악한 화요파에 대해 공세를 취했다. 우선 중국 전역에 걸쳐 11개구로 된 지역단위를 설정하고, 상해를 중심한 관내지역을 제1구로 정했다. 그러면서 중본한청의 대표로 파견되었던 이관수를 상해로 귀환시키면서,⁵⁴⁾ 상해에 ML파 중심의 재중한청 제1구 조직책임자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중본한청의 공산계 중앙집행위원인 이관수는 재중한청의 일지대적인 활동을 하고자 이에 가입하고, 1928년 8월에 일방적으로 중본한청상해지부의 해체를 선언한 뒤,⁵⁵⁾ 이어서 상해에서 재중한청 제1지구의 창립을 선언했다.⁵⁶⁾ 이에 鄭泰熙·韓鎔 등은 그 선언을 반박하고 중본한청에서 이관수를 제명시켰다.⁵⁷⁾ 이에 따라 축성회의 전위조직인 중본한청에서 ML파가 이탈하고 우익진영과 화요파만 잔존하였다.

1929년 후반기로 들면서 둘째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것은 앞의 구도에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증첩·부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새로운 축은 국제주의 대 민족주의의 대립 구도였다. 즉 코민테른이 <12월테제>로 지령한 민족부르조아 세력과의 결별 요구를 좌익진영이 받아들여 유일당운동을 좌절시킨 것이었다.⁵⁸⁾ 국제주의 노선을 강하게 띠고 있던 ML파의 논리와 태도

54) 원래 정원이 대표였으나 일제에 투항했고, 그 후임으로 파견된 인물이 이관수였다(金正明, 《朝鮮民族運動》 2, 338쪽).

55) 선언은 “... 정당의 조직 원칙 및 과거에 있어서의 쓰라린 경험과 조선의 현실에 따라 단체 본위의 봉건적·할거적 이론을 단연 배제함과 동시에 급후는 재중국한인청년동맹의 1지대로서 우리들이 다하지 못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고 함”이라고 주장했다(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 7, 1405쪽).

56) 秋憲樹, 《韓國獨立運動》 2, (延世大出版部, 1972), 94쪽.

57)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410쪽.

58) <12월테제>는 1928년 7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제6회 대회에서 채택된 방침에 기초하여 그 해 12월에 작성되었다. <12월테제>가 발표될 당시 코민테른은 신간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국외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운동에서는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ML계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인 한위건이 1929년 12월 1일, 天津에서 발간된 《階級鬭爭》에 기고한 논문에서 “현재 조선○○주의 운동 진영에는 신간회의 즉시 해체론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것은 국외에서의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었다(李鐵岳, 〈大衆的戰鬪的協同戰線의 結成と新幹會及獨立促成會의 任務〉; 李均永, 《新幹會研究》, 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0, 198쪽에서 재인용).

가 종래 우파와의 결합을 우선시하던 화요파의 그것을 누르고 승세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의열단도 ML파에 지지를 보냄으로써 우열은 확연히 드러났다.

이러한 충돌은 특히 1929년 7월에 재중한청제1구상해지부가 발표한 격문에 의해 결정적으로 대두하였다. 그 격문 가운데는 “제군의 조국 소비에트 러시아는 제국주의 강도군의 무력적 포위에 직면하였다”는 귀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익진영은 그 내용을 “모국을 팔아먹고 조상을 바꾸는 행위”라고 강렬하게 비판을 제기하였다.⁵⁹⁾ 그때 우익세력과의 연합을 ML파보다 강하게 유지하고 있던 화요파는 그 동안의 대립적 관계를 넘어서서 결속을 도모하였다. 결국 좌파의 두 세력 모두가 좌익 국제주의 노선을 걷게 되었다. 즉 좌익의 두 세력은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주의의 논리를 내세워 코민테른-소련의 지도적 지위를 절대시하고, 그 권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풍조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은 좌우익의 진선분리”⁶⁰⁾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유일당상해축성회가 1929년 10월 26일에 해체되었다.⁶¹⁾ 상해에서도 만주의 전민족유일당축성회의와 마찬가지로 조직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해체선언서〉에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였다.⁶²⁾ 이 선언문은 관내축성회가 성립된 후 만주에서는 독립당의 조직 방법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어 유일독립당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이 선언은 一國의 혁명을 지도할 대당의 결성은 구체적인 조건 아래에서 대중적 공동투쟁을 통하여야만 결합할 수 있다고 하고, 시대의 추이로 볼 때 유일당이나 아니면 협동전선이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유일당론’의 단계가 아닌 ‘대중적 협동전선론’을 주장했다.⁶³⁾

1929년 10월 26일에 상해축성회 해체를 결의하기 위한 모임이 프랑스 조계의 斜橋에 있던 惠中學校의 대강당에서 열렸다.⁶⁴⁾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

59)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425~1429쪽.

60) 김영범, 앞의 글(1994), 128쪽.

61) 〈해체선언〉은 1929년 11월에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해체가 결의된 시일은 그보다 조금 앞선 10월 26일이었다.

62)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35쪽.

63) 이 문제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신간회에 대한 안광천·한위건의 이론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적인 인물은 사회를 맡은 崔昌植을 비롯하여 洪南杓・黃勳・具然欽・郭憲・鄭泰熙・李敏達・崔鳳官・曹奉岩・金元植(金炯善)・李東寧・金料奉・趙琬九 등 좌우파를 대표한 인물이었다.⁶⁵⁾ 그렇지만 대다수의 인물이 좌파세력의 대표들이었고,⁶⁶⁾ 그것도 화요파와 ML파의 양 세력이 동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⁶⁷⁾ 참석자 가운데 이동녕과 조완구만이 우파인사인 셈이었다. 이 모임에 우파세력 가운데 오직 이동녕과 조완구의 2명만이 참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당시에 임시정부의 주석 겸 법무장을 맡고 있던 이동녕이 참석함으로써 그 비중은 컸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유일당운동에 있어 가장 중심인물이었던 안창호나 임시정부의 내무장이면서 실제로 부각된 김구 등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우파세력은 좌파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서 의례적인 대표만 참석하도록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사회자인 최창식의 주도로 상해촉성회의 해체를 결의하였으니,⁶⁸⁾ 이로

64) 이 학교의 이름을 ‘斜橋中學校’라고 기록한 경우도 있으나,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프랑스 조계의 斜橋에 있던 惠中學校가 옳다. 이 학교는 현재 李惠利中學校가 되어 있다(金喜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274쪽).

65) 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38쪽.

〈外務省警察史 支那之部〉(《朝鮮民族運動史》(未定稿)6, 고려서림, 1989), 618쪽.

66) 이들 가운데 홍남표・황훈・구연흥・곽현・정태희・이민달・최봉관・조봉암・김원식(김형선)・김두봉 등이 좌파세력이었다. 이들의 대다수가 이르쿠츠크・화요회계열인데, 뒤에 언급하겠지만, 동일한 자리에서 열린 유호동맹 창립과정에는 ML계열인 黃俊(韓偉健)의 참석과 鄭栢이 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된다(〈外務省警察史 支那之部〉(《朝鮮民族運動史》(未定稿)6, 고려서림, 1989), 619쪽). 당시의 성향으로 김두봉과 정태희는 중도좌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김두봉은 1920년대에 임시정부 중심의 우파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유호동맹의 결성 직후인 1930년 1월에 우파세력의 결집체로 조직되는 한국독립당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정태희는 1920년대에 출공 민족주의계열에서 활동했으나, 유호동맹에 가담하는 무렵에는 공산주의자로 나타난다. 그가 언제부터 공산주의자로 전향하였는지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본다.

67) 이러한 사실은 유호동맹의 기관지인 《앞으로》의 창간호 가운데 〈독립당촉성회의 해체와 독립운동자연맹의 창립경과〉라는 기사에 해체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간무처리위원으로 洪南杓・朴仁煥・鄭臺寅 등이 선출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좌파 단체인 유호동맹이 조직된 내용으로 알 수 있다(國會圖書館, 《韓國獨立運動史料(中國篇)》, 638쪽).

68) 최창식에 대한 일본 관헌의 기록에는 그가 해체과정을 주도했던 것으로 정리하

써 상해지역의 좌우합작운동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상해총성회가 해체되면서 유일당운동은 일단 멈추었다. 그 자리에서 좌파는 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滬: 상해의 별칭)을 조직하였다. 그러자 3개월 뒤인 1930년 1월 25일에 임시정부 중심의 우파세력은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결국 좌우합작을 통한 유일당 결성이라는 꿈은 깨어지고 각각의 조직으로 분립되었는데, 우파는 전체를 통합한 대혁명당은 아니지만 일단 정당체를 결성하는 데 이르렀다. 이것은 조직 성격상으로 발전한 것이라 규정할만하다. 1920년대 전반을 거쳐오면서 독립운동의 조직이 의열투쟁 단체라거나 임시정부 지원을 도모하는 단체 등이 있었지만, 임시정부 자체를 경영해 나갈 정당조직이 없었고, 때문에 정당 결성을 위한 노력이 되풀이 되었는데, 그 결실이 이때 와서 비로소 맺어진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단일당·민족대당·대혁명당은 아니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합작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독립당이 채택한 이념에 경제·사회 분야에서 사회주의 요소를 표방함으로써 장차 좌파세력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기도 했다. 그래서 유일당운동은 1933년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 추진되면서 다시 부활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중심에 임시정부가 존재했다. 더러는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름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을 때까지 항상 민족운동세력의 통일운동에서 핵심에 놓여 있게 된다.

〈金喜坤〉

였다(〈外務省警察史 支那之部〉, 《朝鮮民族運動史》(未定稿)6, 고려서림, 1989, 618쪽).